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대한민국의 기적,
이제는 나 . 님 . 으 . 로 .



우리나라의 ODA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DA Korea 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
EDCF 홈페이지(<http://www.edcfkorea.go.kr>)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ODA



발간사



대한민국은 외국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외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빈국에서 벗어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991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각각 설립하고 본격적인 해외원조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이후 우리의 ODA 규모는 DAC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2017년 ODA 예산 규모는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ODA를 추진하면서 사업의 질적 수준도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사회·경제·환경을 포괄하는 개발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ODA 사업추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효과적인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를 통해 우리의 ODA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등 지속가능개발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ODA를 지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활발히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백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개발협력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백서는 우리 ODA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ODA의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계기도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ODA 사업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17년 8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이 상연' (Park Sang-yeon).

CONTENTS

01

ODA 개관

1. ODA란 무엇인가 **_08**
2. ODA의 동기와 목적 **_13**
3.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 **_15**

02

우리나라 ODA 역사

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_24**
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_28**

03

우리나라 ODA의 추진체계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 발자취 **_38**
2. 우리나라 ODA의 추진체계 **_40**
3. 우리나라 ODA의 추진절차 **_44**

04

우리나라 ODA의 정책 및 전략

1. 우리나라 ODA 정책의 발자취 **_56**
2.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 **_59**
3. 우리나라 ODA의 정책 및 전략 **_61**



05

우리나라 ODA의 현황 및 실적

1. 선진 공여국의 ODA 현황 _92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_99

06

우리나라 ODA와 민관협력

1. 민관협력 ODA의 개념 및 유형 _110
2.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ODA 추진현황 _113

07

우리나라 ODA와 국제협력

1. 국제개발협력 논의 참여 _128
2.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_133
3.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_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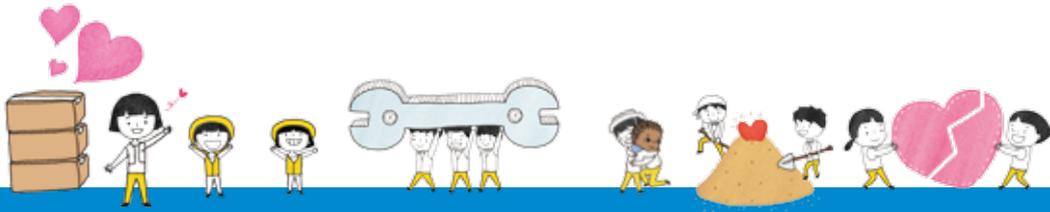
08

우리나라 ODA의 발전방향

1.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_146
2. 효과적이고 투명한 ODA _151
3. 함께하는 ODA _154



공적개발원조(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ODA는 1945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고,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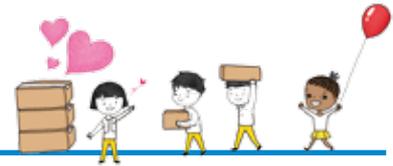


ODA 개관

1. ODA란 무엇인가
2. ODA의 동기와 목적
3.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

01

제1절 ODA란 무엇인가



1. 국제개발협력과 ODA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ODA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있다. 이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는 해당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

용어해설

OECD DAC 1961년 출범한 ODA 주요 공여국 간 회의체로서, 회원국 간 상호협력, 정보교환, 정책조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DAC은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대 위원회의 하나이다.

기술협력 (Technical Assistance)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술, 지식, 노하우 및 생산능력 향상 기법 등의 전수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 훈련, 전문가 파견, 정책 및 기술자문, 조사 및 연구준비 지원,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여금 조성 등이 모두 기술협력에 해당한다.

개발재원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적개발원조와 기타자금을 의미한다.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 공적자금과 해외 직접투자 등 민간자금, NGOs의 민간 증여 등이 포함된다.

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빈곤의 문제를 주로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빈곤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역량 강화, 지속가능 개발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원조(Aid)와 관련하여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ODA의 요건

OECD DAC는 ODA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ODA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공여의 주체로,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공여의 목적으로,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적 목적, 상업적 목적 등을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셋째, 공여 대상으로, ODA는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거나, DAC이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공여 조건으로, 차관인 경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 2018년부터는 ODA 인정증여율을 소득 그룹별로 차등화하고 측정 방식은 순지출(총지출액-총상환액) 방식에서 증여 등가액(총지출×증여율) 방식으로 변경

OECD DAC 협력대상국 목록(2014~2016)

〈출처: DAC List of ODA Recipients〉

No.	최빈국 (48개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 저소득국 (4개국) (Other Low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1,045)	중저소득국 (36개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1,046-\$4,125)	고중소득국 (58개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4,126-\$12,745)
1	아프가니스탄	북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2	앙골라	케냐	볼리비아	알제리
3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카보베르데	안티구아&바부다
4	베냉	짐바브웨	카메룬	아르헨티나
5	부탄		콩고	이제르바이잔
6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벨라루스
7	부룬디		이집트	벨리즈
8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No.	최빈국 (48개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 저소득국 (4개국) (Other Low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1,045)	중저소득국 (36개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1,046-\$4,125)	고중소득국 (58개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4,126-\$12,745)
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지아	보츠와나
10	차드		가나	브라질
11	코모로스		과테말라	칠레
12	콩고민주공화국		가이아나	중국
13	지부티		온두라스	콜롬비아
14	적도기니		인도	룩아일랜드
15	에리트레아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16	에티오피아		코스보	쿠바
17	감비아		키르기스 공화국	도미니카
18	기니		미크로네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19	기니비사우		몰도바	에콰도르
20	아이티		몽골	피지
21	키리바시		모로코	마케도니아
22	라오스		니카라과	가봉
23	레소토		나이지리아	그레나다
24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이란
25	마다가스카르		파푸아뉴기니	이라크
26	말라위		파라과이	자메이카
27	말리		필리핀	요르단
28	모리타니아		사모아	카자흐스탄
29	모잠비크		스리랑카	레바논
30	미얀마		스와질랜드	리비아
31	네팔		시리아	말레이시아
32	니제르		토켈라우	몰디브
33	르완다		우크라이나	마셜 군도
34	상투메프린시페		우즈베키스탄	모리셔스
35	세네갈		베트남	멕시코
36	시에라리온		팔레스타인	몬테네그로
37	솔로몬 군도			몬트세라트
38	소말리아			나미비아
39	남수단			나우루
40	수단			니우에
41	탄자니아			팔라우
42	동티모르			파나마
43	토고			페루
44	투발루			세인트헬레나
45	우간다			세인트루시아
46	바누아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47	예멘			세르비아
48	잠비아			세이셸

No.	최빈국 (48개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 저소득국 (4개국) (Other Low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1,045)	중저소득국 (36개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1,046-\$4,125)	고중소득국 (58개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인당 GNI \$4,126-\$12,745)
49				남아프리카공화국
50				수리남
51				태국
52				통가
53				튀니지
54				터키
55				투르크메니스탄
56				우루과이
57				베네수엘라
58				월리스푸투나제도

3. ODA의 지원 형태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여)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민간자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국으로부터 공여 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를 지닌다.

다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범분야(Crosscutting)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여(Contribution)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Subscriptions)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방식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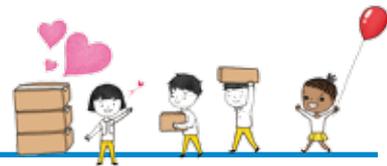
한편, ODA를 경쟁 입찰 제한 등 조건 부과 여부에 따라서 구속성(Tied) 원조와 비구속성(Untied) 원조로 구분하기도 한다. 구속성 원조는 ODA 사업에 대한 입찰자격을 해당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에게만 부여하거나 물자 및 서비스 등의 조달처를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협력대상국이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조 유형(Types of Aid)

주체	상환의무의 유무	원조 유형
양자간	무상원조(증여, Grant) : 상환의무 없음	예산지원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프로젝트 원조 전문가 및 기타 기술 협력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유상원조(비증여, Non-grant) : 상환의무 있음	채무 구제 행정비용 기타 공여국 내 지출
다자간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 본 백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원조'와 '협력' 표현을 혼용

제2절 ODA의 동기와 목적



ODA의 주요 목적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있다. 다만, 각 공여국은 서로 다른 국가적 이념과 목표, 협력대상국과의 역사·문화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모든 ODA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ODA를 제공하는 주요 동기는 크게 정치·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 또한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1. 정치·외교적 동기

ODA는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전통적 군사 동맹이나 이데올로기, 역사적 관계, 안보적 고려, 대외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동서진영은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경쟁적으로 ODA를 공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유럽의 전통적인 공여국에서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개발협력 활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신흥국과의 외교관계 증진을 위해 ODA가 강조되기도 하며,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및 소프트 파워(soft power) 확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각국은 외교관계나 대외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기 때문에 ODA의 대상국이나 형태, 지원분야 등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경제적 동기

경제적 동기는 ODA를 통해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기반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수출시장이 확대되면 공여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우

리나라도 동남아시아 등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다만,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ODA 지원은 지양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ODA를 통해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인도주의적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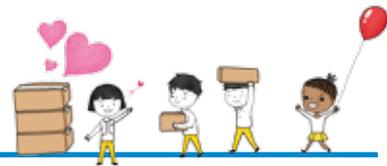
인도주의적 동기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예: 인권 등)의 실현을 위해 절대빈곤 해소를 추구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된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ODA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의무라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세계 공동체'라는 관념을 기조로 하고 있는 1969년의 '피어슨 보고서(Pearson Report)'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4. 상호의존적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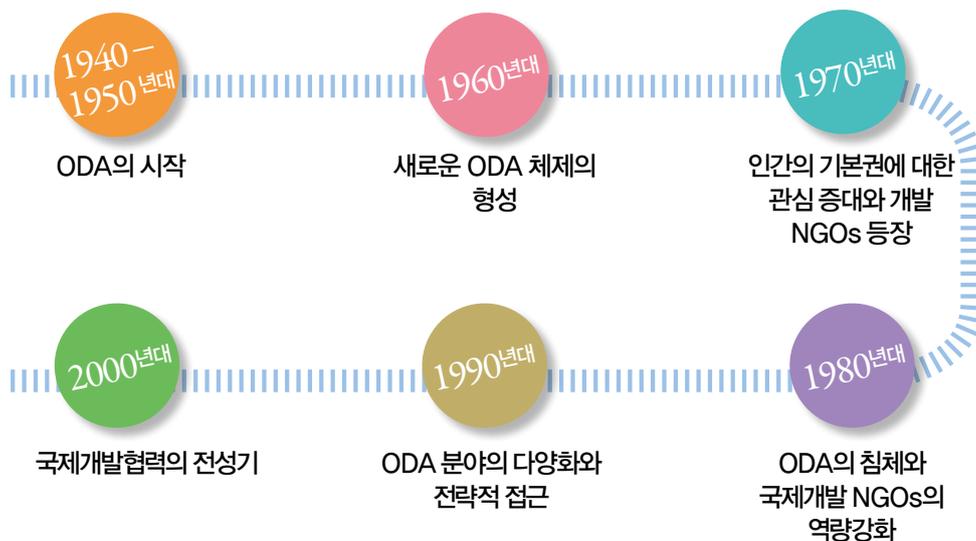
오늘날과 같이 정보와 인구의 유동성이 높고 국가·지역 간 연계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와 질병확산 등 초국가적 과제뿐만 아니라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 등도 테러와 난민사태와 같이 지구 전체의 안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여국들은 협력대상국을 단순히 원조를 제공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하여 ODA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가마다 역사·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ODA 목표와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와 함께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동기와 목적이 결합하여 ODA 추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UN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인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을 권고해 오고 있다.

제3절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



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외교적 지지 확보를 위해 원조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ODA는 국제 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1940 - 1950년대 ODA의 시작

ODA는 1945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고,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보건

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UN아동기금(UNICEF: UN Children's Fund)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 1950년대에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들에게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면서 ODA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이후 다자원조의 근간이 되었다. 한편, 양자원조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전후복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새로운 ODA 체제의 형성

UN은 1961년 제16차 정기총회에서 1960년대를 '제1차 개발의 10년'으로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이 매년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 국민총생산(GNP)의 1%를 개발도상국 원조에 사용하도록 촉구하였다.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61년 OECD DAC의 창설로 이어졌으며, 이후 OECD DAC은 개발원조 정책의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원조통계를 표준화하여 비교·분석하는 등 ODA 대표 논의기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1960년대의 ODA는 세계적인 산업화 기조와 함께 대규모 산업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신생독립국들의 사회기반시설, 즉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970년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개발 NGOs 등장

1960년대에 이어 UN은 1970년대를 '제2차 UN 개발의 10년'으로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이 연평균 6%의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5% 증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국민소득(GNI)의 0.7%를 ODA로 공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석유위기와 세계적 불황 속에서, 기대했던 ODA의 비약적인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발도상국의 빈곤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원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사회발전의 지표로 삼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원조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OECD DAC도 경제성장이 아닌 빈곤감소에 초점을 맞춘 ODA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에는

비정부기구(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가 개발협력 주체 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NGOs는 정부 주도의 ODA 체제 하에서 긴급재난구호에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술훈련과 농촌개발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이에 발맞추어 공여국들은 NGOs를 통한 ODA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ODA의 침체와 국제개발 NGOs의 역량강화

UN은 선진국들이 GNI의 0.7%를 ODA로 지원하도록 지속 촉구하였으나, 이 시기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국제수지 또한 악화되어 주요 선진국들의 원조예산은 동결되거나 줄어들었다. 석유위기와 경기침체로 개발도상국의 채무는 점점 늘어갔으며,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IMF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이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되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국내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ODA는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미디어의 발달로 대규모 재난이나 세계 빈곤지역의 소식이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긴급재난구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국제개발 NGOs의 전문성과 기능이 점차 강화되었다.

1990년대 ODA 분야의 다양화와 전략적 접근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공여국들은 원조를 통한 이념경쟁에서 벗어나 개발과 빈곤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많은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의 국민 참여와 이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 정비가 전제되어야 함을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도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빈곤, 보건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다양해졌다. 경기침체 속에서 ODA의 개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OECD DAC은 공여국의 원조정

책이 무역 및 금융 등 기타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은 경제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수혜자 중심의 개발정책과 사업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자는 ‘참여적 개발’의 개념을 소개했다. 개발도상국 내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대상국의 주인 의식,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공여국 간의 원조일치 등의 이슈도 등장하게 되었다.

2000 - 201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전성기

2000년대 들어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발표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0년 9월 제55차 UN 정기총회(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189개국 정상들은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 6월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제시하는 MDGs를 발표했다.

MDGs는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로서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 인권 신장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에이즈·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등 8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MDGs는 개발협력의 실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UN의 189개 회원국가와 국제기구, NGOs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공동의 목표수립에 따라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한 개발자원 확대와 그 효과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자개발협력기구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대표들은 OECD DAC을 중심으로 원조효과성에 관한 주요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논의를 확산시켜 갔다.



용어해설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공여국의 대외원조정책과 무역, 외교, 안보, 환경 등과 같은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1990년대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이루기 위해 개발도상국 내 건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건전한 공공행정 또는 선정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효과적인 공공정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주적이고 개방된 다원적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지칭한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립, 인권존중 및 언론의 자유, 공평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법제도를 포함한 법치주의의 확립, 부패 방지, 나이가 과도한 군비지출 억제 등을 포괄한다.

먼저, 2003년 로마회의(HLF-1: High Level Forum on Harmonization)에서는 최초로 원조 효과성을 독립 의제화한 ‘원조 조화에 관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을 채택하였고, 2005년 파리회의(HLF-2)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개의 핵심원칙과 12개 이행지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 아크라회의(HLF-3)에서는 파리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가속화를 위한 아크라행동강령(AAA: 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이자 동반자로서 시민사회단체(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의 역할을 부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정책과 절차의 조화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M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사항을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원조는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집행하며 국가 상황에 맞는 원조조화 노력을 도모한다. 둘째, 기타 공여국 및 기구와의 원조조화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절차의 개혁과 변화를 도모한다. 셋째, 우수 시행사례를 발굴해 널리 공유한다.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개발원조 활동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협력대상국이 자국의 개발방향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개발전략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협력대상국의 주인인식), 둘째, 공여국은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과 체제를 기반으로 원조 절차를 진행하며(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일치), 셋째, 협력대상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공여기관의 원조활동을 상호 조정하며(공여국 간 원조조화), 넷째, 개발 목표에 근거한 성과를 중심으로 원조 프로그램을 관리해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며(성과지향적 관리), 마지막으로 협력대상국과 공여국 모두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상호책임성 강화).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2008년 국제사회는 가나 아크라에 모여 파리선언 핵심원칙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미진한 분야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립된 아크라행동강령은 파리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 시민, 의회, 지방정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전략 수립 과정에 보다 참여하고, 원조 집행 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대상국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주인인식 강화). 둘째, OECD DAC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기타 다양한 공여국, 민간재단 및 시민사회 등 모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도모한다(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셋째, 원조의 집행에 있어 개발성과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측정가능한 영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성과지향적 관리).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급 회의(HLF-4)로서 파리선언의 원칙과 행동계획의 이행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총회에서는 모든 개발주체를 포용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개념을 담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결과문서로 채택하였다.

부산 파트너십은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중심의 기존 개발협력의 틀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Emerging Economies)과 민간, 시민사회 등 새로운 개발주체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전의 국제개발협력 논의는 원조 전달과정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부산총회를 계기로 ODA 이외의 다양한 개발자원, 협력방식, 다른 정책과의 조화 문제 등 개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다루게 되었다.

특히, 2012년 6월에는 부산총회 후속 이행체제인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DC)’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기존 정부 중심의 원조효과성 논의를 정부는 물론, 의회·시민사회·민간기업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5년에는 MDGs의 후속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제시되었다.

MDGs가 개발협력의 구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대한 이행 정도를 가늠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목표 도달을 위한 자원 및 불평등, 인권, 평화, 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개별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공통된 목표만을 적용한 점은 MDGs의 한계로 인식되었다.

MDGs 달성 시한인 2015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개발 목표인 SDGs가 채택되면서 빈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목표로 했던 MDGs를 넘어 전 세계가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존’이라는 3대 축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공통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된 것이다. SDGs는 UN 정부간 협상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70차 UN총회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최종 합의되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불과 40여 년 만에 OECD에 가입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2010년 1월 OECD DAC에 공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ODA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인정되기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배경 뒤에는 ODA 공여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ODA 수원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ODA 공여와 수원의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ODA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ODA 역사

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02

제1절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7억 불 규모의 ODA를 지원받았다. 1945년 이후 1950년대까지 대표적인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원조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제공된 원조는 긴급 구호부터 구조조정 프로그램까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개발에 일조하였으며,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은 ODA를 활용한 경제·사회 발전의 좋은 모델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원 역사 : 원조 전환기에 따른 구분

	목적 및 욕구	형태 및 양식	분야 및 구성	원조 의존도	주 공여자
1945 - 1952	• 긴급구호	• 증여(100%) • 구호물품	• 교육 • 토지개혁	• 원조가 주요 외화 유입수단	• 미국
1953 - 1962	• 군사적 방어 • 안정 • 재건사업	• 증여(98.5%) • 물자 • 기술협력	• 농업 • 물자, 식량지원 • 군사원조 • 소비/중간재	• 높은 원조의존도	• 미국 • UN
1963 - 1979	• 전환기 • 성장 및 투자	• 양허성차관(70%)	• 사회간접자본 • 수입대체 및 수출지 향적 사업 • 프로젝트 원조 및 중간자본재	• 절대/상대적 원조 중요성 감소	• 미국 • 일본
1980 - 1992	• 과도한 채무 • 안정 및 성장균형	• 비양허성차관	• 섹터 차관	• IDA 협력대상국 명단 졸업	• 일본 • 독일 • 국제금융기구
1993 - 2003	• 금융위기	• IMF 구제금융	• 구조조정 프로그램	• ODA 협력대상국 명단 졸업	• IMF • IBRD

1. 전후복구와 무상원조(1945~1961년) : 긴급구호, 경제안정 및 방위지원 원조중심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상원조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시작되어, 미군정 시기 및 6·25전쟁을 거쳐 195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재건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제공된 국제원조는 약 30억 불 규모로 식량지원·의약품 등의 긴급구호와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6·25전쟁 직후에 이루어진 원조는 전쟁 후 민간투자의 유인이 취약하던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거의 유일한 외국자본이었으며, 이 시기의 원조는 긴급구호 등의 인도적 지원에 집중되었다.

한편, 1950년대 후반의 원조는 군사적 방어와 안정 및 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의식주 해결을 위한 물자 및 식량원조 중심의 소비재 지원 기초 하에서 경공업 육성을 위한 중간재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는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등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 중심이던 우리나라에 대한 무상원조 비율은 195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며, 1959년부터는 유상원조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57년 미국 원조식량 부산항 입하
〈출처: 국가기록원〉



1959년 유엔한국부흥기관(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구호물자 전달
〈출처: 국가기록원〉

2. 경제성장과 유상원조(1962~2000년) : 개발차관 중심의 경제원조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수립하던 시기였다. 1950년대의 긴급구호와 군사전략적 원조에서 벗어나 기술협력, 유상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원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960년 1월에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어 외자 도입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국 이외의 선진국으로부터 외자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공여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기간산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정비,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둔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추진자금의 대부분을 개발차관으로 충당하였다. 이 시기에 도입된 개발차관은 공업 부문 발전의 바탕이 되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원조에 집중되었다. 이후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67~1971년) 중에는 외자도입법을 정비하고, 외교 노력 등을 통해 차관 도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투자에 집중된 결과 연평균 9.7%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KIST(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65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공업발전을 위한 연구소 설립에 합의함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되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경부고속도로: 1968년 4월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국내재원과 해외 차관을 활용하여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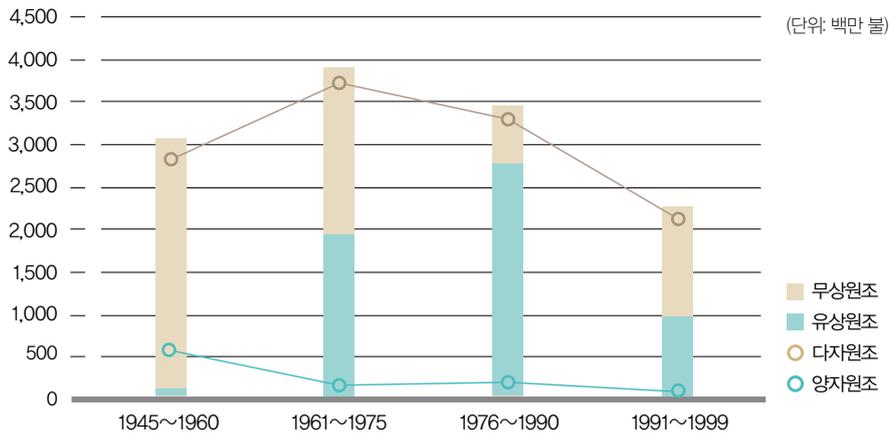


포항종합제철: 협력대상국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계획 및 시행된 국책사업으로 개발원조사업을 통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자본과 기술의 격차를 극복한 사례이다. <출처: Nocut News>

제3차(1972~1976년) 및 제4차(1977~1981년) 경제개발계획기간 중에는 중화학공업 건설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소요되는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해외 차입자금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 차입의 증가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나, 제2차 석유파동, 교역조건 악화 등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1979년 한때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대외 채무 잔액이 크게 팽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채 부담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전까지의 프로젝트 중심 차관은 특정 부문 개발을 위한 섹터 차관 및 경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 차관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차관 중 비양허성 자금의 비율이 높아졌고, 공여국 및 기관도 일본, 독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ADB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ODA 협

력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2000년에는 OECD DAC의 ODA 협력대상국 리스트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원국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ODA 수원 실적



이처럼 우리나라가 제공받은 ODA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개발에 일조해 왔다. 특히, 경제성장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발할 매력적인 시장이나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차관자금 도입과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운용, 사업의 수행 및 상환에 이르는 과정에 걸쳐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경제자립능력을 배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결과,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은 물론 선진기술의 도입, 생산 및 고용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였다.

제2절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 있었던 1960년대부터 원조공여국으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3년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수생 초청사업을 실시하면서 최초로 ODA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물자와 자본을 지원함과 동시에 해외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파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ODA를 실시하였다.



1960-1970년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3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삼각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사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1965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실시한 최초의 ODA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에는 전문가 파견 사업, 1968년에는 의료단 파견 사업, 1969년에는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1968년 의료단 파견사업에 참여하여 니제르 니아마 병원에 파견된 의료진 <출처: KOICA>

이와 같이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ODA 활동은 우리나라 정부 자체의 자금보다는 주로 UN 등 국제기구의 자금을 지원받아 실시되었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아 소수의 정부부처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ODA 수요가 확대되면서, 1977년에 외무부가 9억 원의 원조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기자재를 공여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정부는 자체 자금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80-199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ODA 공여 활동은 좀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2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DEP)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건설부에서 현재의 개발조사 사업에 해당하는 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을 시작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ODA 지원 분야도 좀 더 확대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은 주요 국제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경제성장도 지속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대외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역시 ODA 증대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1987~1990 연도별 ODA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1987	1988	1989	1990
1. 양자간 협력	1.4	2.1	5.1	12.3
무상협력	1.4	2.1	3.3	3.3
유상협력	-	-	1.8	9.0
2. 다자간 협력	22.1	31.9	28.8	48.9
출연	3.2	3.6	3.8	4.7
출자	18.9	28.3	16.3	44.3



용어해설

국제개발연찬사업(IDEP: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1982년부터 KDI가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사와 경제관료 및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경제발전 모델을 전수하는 국제교류 협력 프로그램이다.

구분	1987	1988	1989	1990
양허성차관	-	-	8.8	-
3. 합계	23.5	34.0	33.9	61.2
ODA/GNI (%)	0.02	0.02	0.02	0.02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ODA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무상원조 전담기관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조 실시 체제를 확립하였다. 1987년에 재무부가 300억 원 규모를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하고, 기금의 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였으며, 1991년에는 무상협력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치하는 등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1989년에 ‘한국해외청년봉사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1994년에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자원이 해외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5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NGOs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6년에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면서 신생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초의 OECD 회원국이 되었으며,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1~2000 연도별 ODA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 양자간 협력	31.6	45.3	60.2	60.1	71.5	123.3	111.4	124.7	131.3	131.2
무상협력	25.1	31.0	32.8	38.5	50.1	53.4	54.8	37.2	38.9	47.7
유상협력	6.5	14.2	27.4	21.6	21.4	69.9	56.6	87.5	92.4	83.4
2. 다자간 협력	26.0	31.6	51.4	80.2	44.5	35.8	74.3	58.0	186.1	80.9
출연	5.8	8.0	10.3	12.9	14.8	30.1	29.1	33.6	67.7	26.1
출자	11.8	21.5	25.7	-	22.7	5.8	35.5	28.3	129.5	61.5
양허성차관	8.4	2.1	15.5	67.3	7.0	-	9.7	-3.9	-11.0	-6.7
3. 합계	57.6	76.9	111.6	140.3	116.0	159.2	185.6	182.7	317.5	212.1
ODA/GNI (%)	0.02	0.02	0.03	0.04	0.02	0.03	0.04	0.05	0.07	0.04

2000-2010년대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MDGs 및 SDGs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선진 공여국 간 협력체인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같은 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이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주최함으로써 모든 개발 주체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DC)’ 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2014년 이후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연례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효과성 달성과 GPEDC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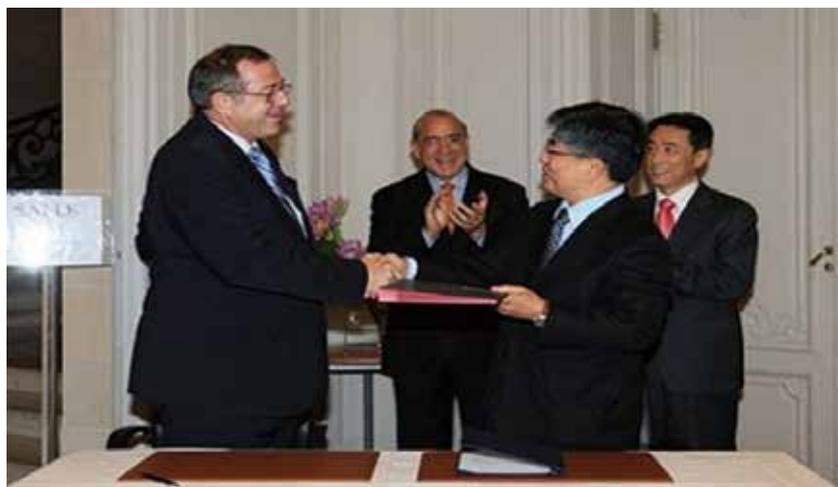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2003)」,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2005)」, 「ODA 중기전략(2007)」 등의 정책문서 발표를 통해 체계적인 ODA 정책을 수립해 왔다. 또한 2006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차원에서 ODA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ODA 규모의 확대 기초 하에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7년에 국제선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으로부터 기여금(1,000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ODA 재원을 확보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조성된 재원은 주로 최빈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를 기금화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출범시켰다.

우리 ODA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 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서 ODA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0년대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OECD DAC 가입심사 특별위원회에서 DAC 회원국 전원 합의 아래 24번째 DAC 회원국으로 결정되었다.

Eckhard Deutscher DAC 의장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공식화하는 초청서한을 김종수 OECD 대사에게 전달하고 있고,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과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이 축하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 등을 주된 목표로,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 기반에서 개발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높은 국제개발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12년에는 OECD DAC 가입 이후 첫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하여 그간 우리나라가 정비해 온 ODA 추진시스템의 장점과 개선과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개발효과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6년에는 개발협력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ODA에 대한 국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용어해설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 OECD DAC에 가입하면 회원국들은 4-5년을 주기로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동료 검토를 받게 된다. 동료검토는 회원국 간 ODA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과 효율적인 사업실시에 대한 경험 공유 기회를 제공하며, OECD DAC 내의 합의 구축 및 규범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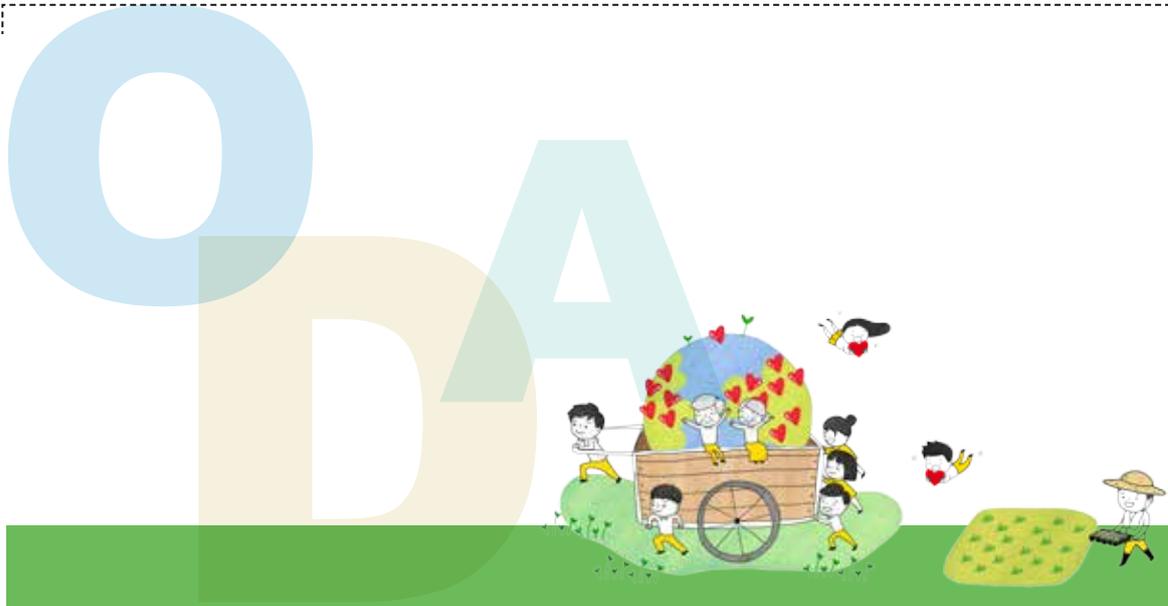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란 공여국, 국제기구, 수원국, 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개발협력 투명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이다.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14개 공여국을 포함, 70여개 회원들이 가입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시의적절한 ODA 정보 공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DA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과 특징

기간	주요 사건 및 특징
1960년대	1963 미국 USAID 원조계획 및 자금을 기반,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 훈련 최초 실시
	1965 자체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사업 실시
	1968 정부자금을 의한 기술(및 전문가) 해외 파견 시작
1970년대	1975 개발도상국 기능공 초청연수 시작
	1977 외교부 한국 장비 및 물자 원조 시작
	1981 KAIST 공동 연구사업 시작
	1982 국제개발교환프로그램(IDEP) 실시
1980년대	1983 건설기술자 초청연수 시작(건설부)
	1984 무상건설 기술용역사업 시작(건설부) 직업훈련원 설립지원 시작(건설부)
	198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창설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 對개발도상국 차관 지원승인(나이지리아) 과학재단에 대외기술공여사업 업무위탁(과기처, 외무부)
	1988 체신부 對개발도상국 통신기술 지원 무상용역사업 시작
	1989 한국정부, 한국청년해외봉사단(KYV) 창설계획 발표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 자금 지출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 차관계약 체결(나이지리아) 경제기획원 무상기술용역사업 시작
	1990 UNESCO 한국위원회, 최초 해외봉사단 파견 시작
	1991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시작
	1992 세계은행(World Bank)과 협조용자 협약 체결
1990년대	1993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조용자 협약 체결
	199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5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 시작 국제협력연수센터(ICTC) 개원 한국국제협력단 민간원조단체(NGOs) 지원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한국수출입은행 간 최초 연계 지원 승인(베트남)
	1996 OECD 가입
	1997 한국국제협력단-한국수출입은행 간 업무협조 약정 체결 교육부,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시작
	2000 대외경제협력기금, 미주개발은행(IDB)과 최초 협조용자 승인
2000년대	2001 정보통신부,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 시작
	2002 한국국제협력단 아프간 지원사업 시작
	2003 한국국제협력단 이라크 지원사업 시작

기간	주요 사건 및 특징
2000년대	2004 재정경제부 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시니어 봉사단 및 NGO 봉사단 파견 시작
	2005 한국국제협력단 서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복구 지원사업 시작 UNV 봉사단 지원 시작
	2006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지원단 파견 시작
	2007 혁신적 개발재원의 일환인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도입
	2009 OECD DAC 가입 확정(11.25)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통과 대한민국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WFK) 출범 EDCF 연간 사업승인 규모 1조원 돌파
2010년대	2010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서 활동 개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심의 확정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주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World Friends Advisor 및 퇴직 전문가 파견 시작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개최(11.29~12.1) 3단계 무상원조 법적기반 수립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교부 - 타부처 MOU 체결 시작(행정안전부, 8.29) 재외공관 중심 현지 ODA 협의회 운영 시작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사업 예산 통합
	2012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개발협력연대(DAK) 출범(12.8) OECD DAC Peer Review 수검 한국형 ODA 모델 수립
	2013 OECD DAC Peer Review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 활용계획 수립 'ODA 협업 활성화방안' 마련, '사업 2년전 예비검토제' 도입 'Post-2015 KOREA FORUM' 출범식 개최(8.26)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완료
	2014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연례포럼 개최 시작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시에라리온 파견(12월) 사전·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ODA 사업 성과 제고방안' 마련 인도적 지원규모 대폭 확대(257억원 → 403억원) 'ODA 백서' 최초 발간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24개국으로 중점 협력국 재조정 EDCF-KOICA간 협력강화 위한 이행계획 체결 OECD DAC Peer Review 중간점검 실시
	2016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1월) 및 원조정보 공개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 취임 신흥국 경험증진자금 실행을 위한 자금운용관리규정 개정
	2017 OECD DAC Peer Review 수검 'ODA 백서' 개정판 발간





현행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형성과정을 거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ODA 최고 정책기구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협력과 무상협력의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한편, 우리나라 ODA의 추진절차는 각 ODA 시행기관별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세부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략 '준비⇒심사⇒승인⇒시행⇒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 ODA의 추진체계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 발자취
2. 우리나라 ODA의 추진체계
3. 우리나라 ODA의 추진절차

03

제1절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 발자취



우리 정부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등으로 ODA를 본격 추진한 이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리 ODA의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우리나라 ODA는 처음부터 유상 및 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기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무상간 조정이 필수적이었으며, ODA 규모 확대에 따라 ODA 시행기관의 수도 증가하면서 보다 강력한 조정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ODA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우리 ODA 추진체계는 유·무상 정책 및 사업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가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ODA 추진체계 형성과정을 주요 계기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87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시기로서, 1987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과 1991년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을 통해 대외원조의 기본적 추진기반을 갖추고 공여국으로의 전환 노력을 경주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유·무상원조가 분리되어 추진되는 가운데, 별도의 조정체계나 국가적 차원의 추진전략은 부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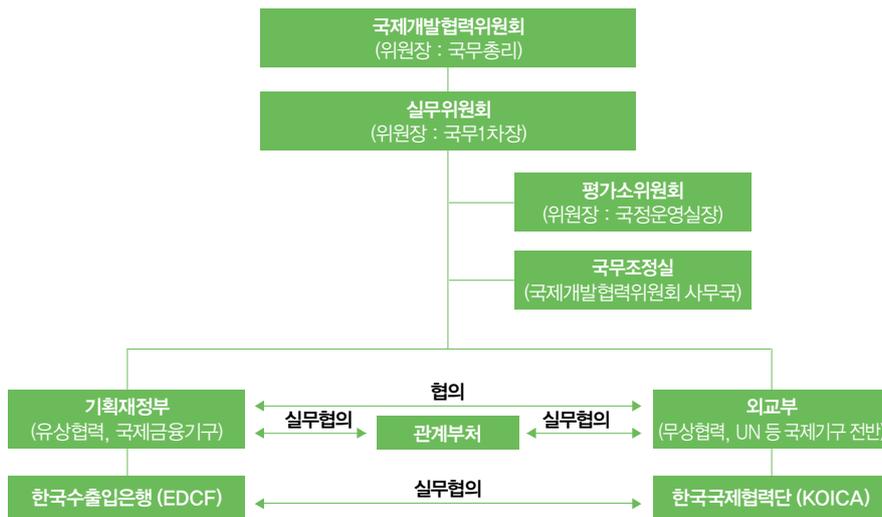
두 번째는 2006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시기로서, ODA 조정체계를 마련한 과도기적 시기이다. 2005년 11월의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06년 1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유·무상원조의 총괄·조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협력대상국별 중기원조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법적 기반이 미흡하였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기관 간 사업 중복이나 분절화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세 번째는 2010년 이후의 시기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조정체계를 크게 강화한 시기이다. 2010년 1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국무총리실(現 국무조정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무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정비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2010.10월)함으로써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유·무상 통합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2절 우리나라 ODA의 추진체계



우리나라 ODA의 통합 추진체계(2017년 현재)



현행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형성과정을 거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 - 주관기관 - 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의하는 ODA 최고 정책기구이다. 2006년 대통령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음 구성된 이래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산하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및 평가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간사기관으로서, ODA 정책 수립·ODA 평가·ODA 사업조정 등에 대한 실무 지원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양자 유상협력과 양자 무상협력 주관기관으로 이들은 각 분야별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다자협력을, 외교부는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을 주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유상협력 사업 발굴, 집행, 평가를 총괄한다. 아울러, ‘EDCF 관계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민·관, 유·무상, 부처·기관 간 사업 발굴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연계사업 확대 등 효율적인 유상협력 추진을 주관하고 있다. 외교부는 무상협력 분야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작성 등 무상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조정을 총괄하고, 시행기관인 KOICA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의장: 외교부 제2차관)’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상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기관들간의 사업중복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무상협력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국제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여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OECD, UN 등)와의 대외협력 채널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한편,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을 ‘시행기관’이라고 지칭하는데, 주요 시행기관으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EDCF의 운용과 관리를 위탁받아 유상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KOICA가 외교부 장관의 감독 하에 무상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DCF는 주로 도로·상하수도 설비·병원 등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 차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KOICA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WFK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EDCF, KOICA 외에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다자협력 등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관계기관의 ODA 사업 추진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유·무상 주관기관의 조정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우리나라 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장기(40년 이내 만기), 저리(0.01~2.5%)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EDCF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차관사업 지원방침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

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EDCF의 운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교통, 수자원·위생, 에너지, 보건, 통신 등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EDCF, 개발금융, 수출금융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추진, 다자개발은행(MDBs)과의 협조용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대내외적인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87년 설립 이래, 2016년 12월말까지 53개 국가 총 375개 사업에 대해 총 15조 1,957억 원을 승인하였으며, 집행누계는 6조 5,469억 원에 이른다. 2009년 처음으로 연간 승인액 1조 원을 넘어선 이래, 2015년 1조 4,442억 원 상당의 사업을 신규로 승인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0월말 기준, 경제·외교적 중요도가 높은 아시아(66%)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신흥시장인 아프리카(22%) 및 중남미(6%)등으로 원조를 다변화 하고 있다.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대외무상원조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KOICA를 설립하였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KOICA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 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해외봉사단파견, 초청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 국제기구협력 등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 설립 이래 2016년 기준 159개국에 약 6조 274억원의 ODA 자금을 투입하였고, 현재 4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KOICA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국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UN 주요 개발기구와 협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사회 내 한국의 영향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환경, 인구, 질병 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간접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3절 우리나라 ODA의 추진절차



1. ODA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

우리나라 ODA의 주요 정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본법(제7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 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연평균 3회 개최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및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의하며, ODA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결정하고 ODA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 ODA 주요 정책이 결정되게 된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전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사전 조율을 거치게 되는데,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부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민간전문가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강도 높은 토론을 통해 부처 간 쟁점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가 반영된 안건이 최종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한, ODA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앞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및 EDCF·KOICA 임원,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다. 특히 전체 평가소위 위원(15명)의 과반수 이상(9명)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ODA

통합추진상 개선이 시급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고(소위평가), ODA 기관들의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 있다. 평가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된다.

이처럼 ODA 관련 주요 정책은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이견 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은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년 3월 2일 제1차 회의가 열린 이래 2017년 6월까지 총 29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회의를 통하여 OECD DAC 가입 여부, 「ODA 선진화 방안」,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협업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인도적 지원 전략」, 「다자협력 추진전략」, 「취약국 지원 전략」 등 우리 ODA의 주요 정책들을 의결하였다.



2017.6.30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실적

회의내역	안건명
제1차 (2006.03)	1. 2006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2.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방안 3. ODA 대국민 홍보강화 방안 4.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2차 (2007.07)	1. ODA 중기전략(2008~2010) 2. 2007년도 ODA추진계획 3. OECD DAC 가입 로드맵 4. ODA 추진 성과사례

회의내역	안건명
제3차 (2008.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8년도 국제개발협력(ODA)추진계획 2. ODA 중기 국별원조전략 수립 3. 개발경험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 4. 원조의 안타이드화 추진 로드맵 5.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책문서(Policy Statement) 수립방안
제4차 (2008.0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기 ODA확대계획 2.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 3.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현황
제5차 (2009.0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9년도 ODA 사업계획 2. ODA 선진화 추진계획 3.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개최
제6차 (2009.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0년 ODA추진계획 2. 범정부적 ODA 홍보강화 방안 3. 중점협력국 단일화 및 통합 국별지원전략 수립 4. ODA 통합평가 추진현황
제7차 (2010.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 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지침 3. ODA 통계기관 선정방안 4.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세부 규칙 6. 아프리카 저개발국 대상 UNESCO 신탁기금사업 추진방안
제8차 (2010.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안 2. 2010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3.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준비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기획
제9차 (2011.0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 계획 2. 20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계획
제10차 (2011.0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개발협력(ODA)주요 현안 2. '12년 주요분야별 ODA 시행계획(안) 통합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 3.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
제11차 (2011.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 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국제기구 신탁기금 실태 점검결과 4.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주요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 OECD DAC 개발협력정책 / 집행심사(Peer Review)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 5. KSP 발전방안
제12차 (2012.0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개발협력 '11년 통합평가결과 및 '12년 통합평가계획 2. '12년 국가협력전략(CPS) 추진계획 3.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4. 한국형 ODA 모델 수립계획
제13차 (2012.0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2. 국가협력전략(스리랑카 등 5개국) 3.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과 향후 추진계획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
제14차 (2012.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 '12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 3. 국가협력전략(방글라데시 등 5개국)

회의내역	안건명
제15차 (2013.02)	1. OECD/DAC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 (Peer Review) 결과 및 활용 방안(안) 2. 국제개발협력 '12년 통합평가 결과 및 '13년 통합평가 계획(안) 3.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안)
제16차 (2013.08)	1.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효과성 제고 방안(안) 2.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3. 국가협력전략 (라오스 등 12개국)(안) 4.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안)
제17차 (2014.01)	1. '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 '13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안) 3.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련 규정 제·개정(안) 4.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 이행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제18차 (2014.03)	1.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안) 2. 2014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계획(안) 3. 국제개발협력(ODA) 주요현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추진계획(안)
제19차 (2014.9)	1. 국가협력전략 수립 발전방안(안) 2. ODA사업 성과제고 방안 3. 다자협력 추진방향 4. 국개위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
제20차 (2015.01.09)	1.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 '14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안) 3.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안) 4. 대국민 ODA 공감대 확보방안(안)
제21차 (2015.03)	1.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 2. '15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계획(안) 3.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안) 4. 제2차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수립 작성지침 5. 국제개발협력(ODA) 주요현안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및 원조정보공개 추진현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
제22차 (2015.11.10)	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2.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및 원조정보 공개방안(안)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
제23차 (2015.12.31)	1.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 '15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
제24차 (2016.2.29)	1.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2. 다자협력 추진전략 3. '16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제25차 (2016.04)	1.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안)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
제26차 (2016.5.30)	1.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3.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방안
제27차 (2016.08)	1.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

회의내역	안건명
제28차 (2016.12)	1.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 '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3.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4. 개발금융의 ODA 활용방안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
제29차 (2017.06.30)	1.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 '16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 3. 취약국 지원 전략

2. ODA 사업계획 조정 절차

ODA 주요 정책방향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각 ODA 시행기관이다. 따라서 각 ODA 시행기관이 ODA 정책방향에 얼마나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유·무상 주관기관 및 국무조정실의 사업 계획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업계획 조정 절차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ODA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사업계획 조정을 거친 ODA 사업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다음 연도에 시행할 ODA 시행계획으로 최종 확정된다.

사업계획 조정 시에는 주관기관 및 국무조정실이 ODA 정책방향을 반영한 공통 사업조정 기준에 따라 ODA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차년도 ODA 시행계획에서 제외하고,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각 ODA 시행기관에서는 차년도에 시행할 예정인 모든 ODA 사업의 시행계획을 유·무상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유·무상 주관기관은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차년도 ODA 사업계획을 토대로 ODA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1차적으로 협의·조정하게 된다. 이후, 1차 조정결과를 국무조정실에 송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유·무상 종합조정 및 연계, 1차 조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한다. 조정결과는 차년도 ODA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년도에 시행이 가능한 ODA 사업목록이 확정된다. 이러한 작업은 정부 부처가 재정당국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는 5월 말까지 마무리되며, 각 ODA 시행기관은 위에서 확정된 사업목록 내에서 부처의 예산사정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ODA 사업에 대

한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한다.

이후, 예산실은 차년도 ODA 종합시행계획과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친다. 정부는 ODA 사업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조정결과 부적격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ODA 사업은 확정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되며, 정부는 차년도 ODA 사업목록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첨부하여 공개하고 있다.

ODA 사업계획 조정절차표



3. 유형별 ODA 사업 추진절차

각 ODA 시행기관별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세부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략 '준비⇒심사⇒승인⇒시행⇒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치며, 유·무상별 또는 다자협력 사업별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ODA 사업의 결정 및 집행 프로세스



1) 유상협력 사업 추진절차

유상협력 사업은 '사업발굴 및 준비⇒지원신청⇒사업 심사⇒정부지원방침 결정⇒차관계약 체결⇒사업실시⇒완공 및 사후평가' 순으로 추진된다.

사업발굴 및 준비단계에서는 국가협력전략(CPS)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개발계획과 개발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후보사업은 협력대상국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책협의를 통해 논의된다. 우리 정부의 차관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협력대상국 정부는 소정의 지원 요청서와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사업실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정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력대상국의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심사를 의뢰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협력대상국에 통보한다. 이후 양허성 차관 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된 공여협정 및 자금의 용도와 기본 지원조건 등이 명시된 시행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대상국 정부 간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명시한 차관 지원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된다.

유상협력 지원조건

정부는 협력대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금리 및 상환기간을 차별화하고, 매년 세계은행의 소득 그룹별 국가분류 변경에 따라 소속 그룹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용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0.01%~2.5% ▲상환기간: 40년 이내 ▲거치기간: 15년 이내 ▲원금상환방법: 연 2회 정기분할 ▲이자징수방법: 매 6개월 후취를 조건으로 차관을 지원하고 있다.

유상협력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 정부는 사업의 준비, 실시 및 운영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 분야의 실적, 과업수행 방법과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 인력, 재무건전성, 기술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정부가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상협력 사업의 이행현황은 최초 자금지출 후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사업 이행상황, 소요자금의 집행계획 및 실적,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진행보고서를 협력대상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사업 완료 후 협력대상국 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완공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완공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사업의 실시목적 달성 여부와 경제·사회적 지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완공평가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사업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신규 유사사업의 발굴, 심사 및 사업 실시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피드백을 실시한다. 이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2) 무상협력 사업 추진절차

무상협력 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발굴협의를⇒공식사업요청서 접수⇒예비 조사⇒사업심사⇒기획조사 및 집행계획 작성⇒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사업평가⇒사후관리'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무상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앞서 우리 정부는 중기전략 및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을 토대로 협력대상국 정부와 사업 발굴 협의를 추진한다.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 전략 및 국가개발계획상의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협력대상국과 발굴 협의를 실시한다.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협력대상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개요서(PCP: 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한 후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력대상국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사업요청 공문을 접수한다.

우리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PCP를 바탕으로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타당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심사를 통해 신규 추진사업을 최종확정한다.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무상협력 사업의 경우, 각 시행기관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 사업 지역과 내용 측면에서 중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외교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가 그러한 조정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며, 기관별 차년도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해 무상 협력의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친 사업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협력대상국과 사업 세부내용을 추가 협의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진행된 무상협력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차기 사업 수행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KOICA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원조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다자협력 사업 추진절차

우리나라 다자협력은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분담하고 있다.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정부가 설치한 신탁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심사를 실시한다. 다자개발은행 관련 다자협력 사업은 '사업발굴(MDB/협력대상국)⇒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업제안(MDB)⇒MDB 제출사업 검토(수출입은행)⇒사업승인(기획재정부)⇒계약체결 및 사업 시행(협력대상국)' 순으로 추진된다.

협력대상국 또는 MDB가 신탁기금의 성격 및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면 먼저 양측이 협의를 실시하고, MDB는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게 요청하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기금목적의 적합성, 사업지원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최종 승인한다. 사업이 승인되면 MDB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협력대상국이 사업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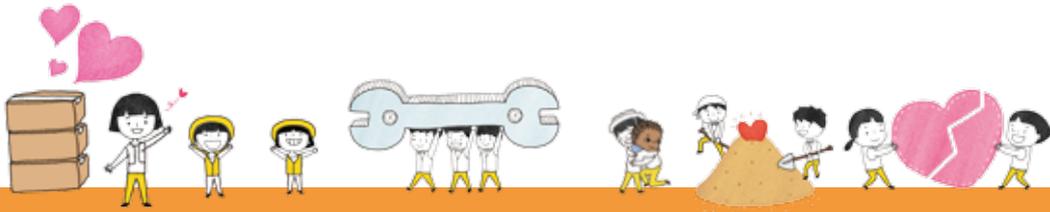
한편, UN 및 기타기구와의 협력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한다. 사업 절차는 사업발굴(재외공관 건의/다자기구 직접 제안/우리 정부 부처 자체 사업 추진 결정)⇒사업담당 부처의 타당성 검토⇒사업조정(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사업 승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사업 시행 순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재외공관의 건의 또는 다자기구의 직접 제안, 우리 정부 부처 자체 결정을 통해 발굴하며, 이후 사업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외교부 주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을 거친다. 이렇게 조정된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년도 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수행 후 담당 부처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새로운 희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명시한 우리 ODA의 기본정신인 틀 안에서 ODA 규모 및 GNI 대비 ODA 비율을 확대하고, ODA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2020년 5년간 적용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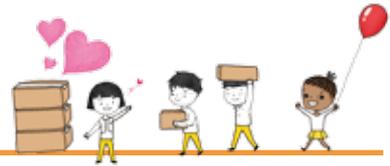


우리나라 ODA의 정책 및 전략

1. 우리나라 ODA 정책의 발자취
2.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
3. 우리나라 ODA의 정책 및 전략

04

제1절 우리나라 ODA 정책의 발자취



1990년대 이후 OECD 가입과 국민소득 1만 불 돌파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ODA 규모와 함께 ODA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와 기관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1월 우리 ODA의 추진방향과 체제 개선 전략 등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종합적인 ODA 정책으로서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당시 대외원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원조 관련 기본법 제정과 함께 대외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원화된 ODA 정책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으며, 원조규모 확대, OECD DAC 가입 등을 검토하였다.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2006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OECD DAC Special Peer Review 등을 거쳐 2010년 OECD DAC 가입과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2010.7월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 OECD DAC 가입과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기본법에 담긴 국제개발협력의 비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우리 ODA의 중장기 목표 및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한 범정부적 국가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10월)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5개년 ODA 중기전략인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선정된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PS)을 2013년 8월 모두 완성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ODA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실천전략인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총 159개의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2013년에는 ODA 기관 간 소통·협력과 유·무상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은 ODA 사업의 모든 추진단계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인 '사업 2년 전(n-2년) 예비검토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 추진절차를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에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 등 국제개발협력의 환경변화와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2차 기본계획은 ODA 규모 및 운용계획, 유·무상 통합 전략 강화, ODA 평가와 환류 강화, 민간재원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점협력국을 26개국에서 24개국으로 조정하고, 2016년 12월 24개국에 대한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 작성을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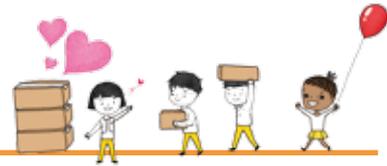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은 원조 이행체계 선진화,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강화 등을 통해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극복하고, 우리의 개발경험과 유·무상협력의 특성과 장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주요 ODA 법률 및 정책문서

구분	날짜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2010.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정신 : 개발도상국 빈곤감소, 여성·아동의 인권향상과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제3조) 국제개발협력 체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무상간 양자·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조효과성 확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 유·무상 협력 비율, 비구속성 비율에 대한 기본틀과 상향 목표 제시 3대 선진화 방안 제시 :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선, 국제활동 참여강화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무상/다자협력(UN 및 기타 국제기구) 및 유상/다자협력(다자개발은행)으로 나누어 중기전략 제시 무상협력 : 개발조사 사업 제고, 프로젝트 사업 비중 강화, 초청연수 사업 시스템개선, WFK 통합운영 시스템 확립, 긴급구호 예산 확대, 비구속성 비율 확대 계획 유상협력 :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 중점지원, 다양한 민관협력 연계모델을 수립하여 KSP 등과 연계, 프로그램 차관 신규 도입 추진, 비구속성 비율 확대 계획

구분	날짜	주요 내용
제1기 국가협력전략 (CPS)	2011~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한 통합 국별협력전략 수립 2011년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를 시작으로 2013년 총 26개국 CPS 수립 완료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2012.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발전경험을 분야별로 나누어 협력대상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총 159개의 프로그램을 정리 ODA 추진원칙(효과성, 조화성, 진정성, 호혜성) 및 추진방식(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확충) 제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규모 확대목표 및 자원 운용계획 제시 SDGs 이행 기여, 유·무상 통합 전략 강화,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원조 사업의 내실화, ODA 평가와 환류 강화,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다양한 민간자원 활용 확대 등 추진과제 제시
제2기 국가협력전략 (CPS)	2015~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협력국가를 24개국으로 조정 2016.12월 총 24개국의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PS) 완성

제2절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정신과 목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기본법 제3조)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이러한 ODA의 기본정신은 우리 ODA의 철학이자 근간으로서 ODA 정책과 집행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

기본법은 이러한 우리 ODA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등(제3조 2항)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 헌장의 원칙 존중 ▲협력대상국의 자조 노력 및 능력 지원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국제사회와의 상호 조화 및 협력 증진을 기본원칙(제4조 1항)으로 하여 ODA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다자간, 유·무상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제4조 2항), 원조효과성 논의와 그 원칙을 법령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

기본정신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목표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제도·조건 개선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 범지구적 문제 해결 기여

기본원칙



UN 헌장 원칙 존중



협력대상국의
자조 노력 및 능력 지원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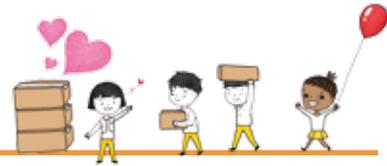


개발경험
공유 확대



국제사회와의
상호 조화 및 협력 증진

제3절 우리나라 ODA의 정책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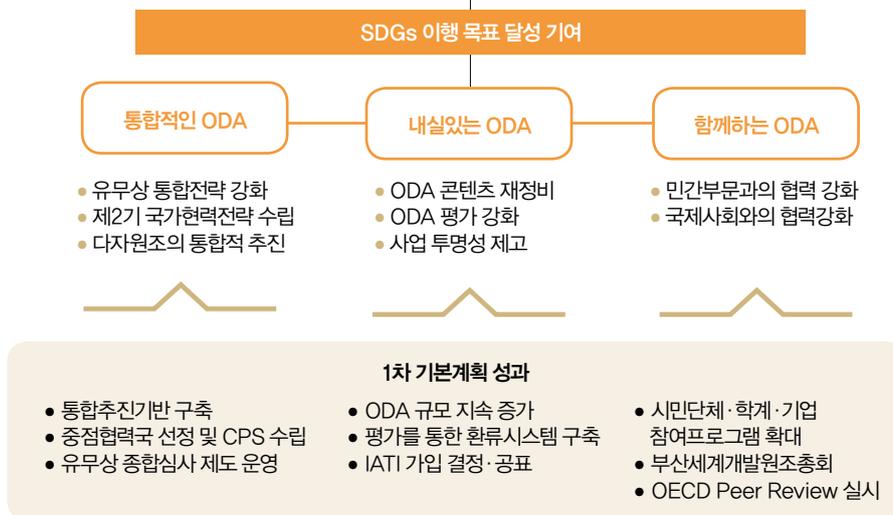


1. 기본 방향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희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10월),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및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마련하여 우리 ODA 정책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정립하였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



우리 정부는 기본법에서 명시한 우리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의 틀 안에서 ODA 규모와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ODA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16년~2020년 5년간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ODA 참여기관과 사업수의 증가세를 감안하여 ‘통합적인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는 통합전략과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협력대상국 수원총괄기관과의 협의 강화 등 사업 발굴 절차를 개선하고 ODA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ODA’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함께하는 ODA’를 통해 ODA 사업에 시민단체·학계·기업의 참여 확대, MOPAN·ECOSOC 의장직 수임 등 국제개발협력 논의 주도와 민간재원 활용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2. 자원규모 및 배분방향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기준 및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ODA/GNI 비율을 2020년까지 0.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인 0.3% 달성을 목표로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ODA/GNI 비율 확대 계획 (단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ODA/GNI금액(승인)	0.15	0.16	0.17	0.18	0.20

형태별로는 양자·다자협력 비율을 75:25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상·무상협력 비율은 2017년까지 순지출 기준 40:60 내외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8~2020년 비율을 재설정하기로 하였다. 우리 양자·다자협력 비율은 OECD DAC 평균과도 비슷한 수준이고 2011년 이후 평균적으로 약 75:25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유·무상협력 비중은 연도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기본계획에 명시된 40:60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도주의 성격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3. 분야별 협력 전략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하여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무상원조 분야의 중복·분절화 방지를 통한 무상 통합 전략 강화와 유·무상 분야의 통합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과 유·무상협력 분야별 계획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논의를 거쳐 매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 유상협력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인프라 개발, 고용창출, 산업화 등 경제성장이 담보되는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ODA 자금만으로는 SDGs 이행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SDGs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인 대규모 민간재원 동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유상협력은 수출금융연계(혼합금융), 저양허성 자금지원(개발금융) 등 민간재원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대상국 법인 앞 차관(민관협력차관) 등을 통해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발전과 불평등 해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SDGs의 기초를 바탕으로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었던 예산 배분을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분산하고 중점지원 분야를 조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ODA 지원 확대기조 아래, 유상협력의 지원규모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16%)하고 있으며, 2017년 약 9,17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후에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ODA/GNI 목표 0.2% 달성”을 위하여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DCF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연도	1987~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금액(승인)	90,099	14,095	15,438	14,865	17,460	151,957
금액(집행)	38,216	6,148	6,308	7,343	7,454	65,469

이와 더불어, 정책자문 사업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유상협력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이 개발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16 KSP 성과공유세미나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한적인 우리 ODA 규모와 지역 정보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 협조용자를 확대하고자 하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공여국과의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아시아개발포럼'을 정례화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완공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공사업에 대한 운영컨설팅 등의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EDCF 사업이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완공 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협력대상국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무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완공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지원 사업으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집약적인 개발협력 사업이다. KSP는 국가정책 자문 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 경제발전 경험모듈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정책 자문 사업은 개발도상국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으로, 협력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국제기구의 개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연계시킨 개발협력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경제일반, 행정·ICT, 농업,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인적자원, 국토건설, 환경의 개발협력 8대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총체적 개발지식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결과물은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되어 향후 지식 기반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와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증가하는 지식공유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사업실시 전 모습



사업실시 후 모습

비엔티안시는 메콩강 동쪽의 평야지대에 위치한 라오스의 수도로 경제·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메콩강의 홍수예방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메콩강 범람 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토지유실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제방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2004년 중장기 국가개발 및 빈곤퇴치 전략(NGPES) 수립시 메콩강 제방축조를 통한 홍수예방 및 국토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07년 중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에 EDCF차관 37백만불을 지원하여 제방축조, 강변도로 건설 및 공원 조성 등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된 결과 라오스는 매년 1.0ha씩 발생해온 국토유실을 방지하고, 450ha 규모의 토양 침식방지를 통해 홍수 피해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기에 홍수 피해로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끼고 피해를 입었던 비엔티안 시민들의 주거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도로 건설 및 공원조성을 통하여 비엔티안 시민들의 교통환경 및 여가문화가 개선되었다.

라오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여 EDCF에 수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EDCF는 2015년중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추가 지원하였다.

우리나라 ODA 활동

볼리비아 파일라스 교량 건설사업

볼리비아 내 도로의 물류운송 점유비율은 82%로 매우 높으나, 넓은 국토에 비해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망이 적고 도로포장율도 약 32%에 불과하는 등 도로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였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Pailon-Puerto Suarez 구간은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으로 우기(11월 - 익년 3월)에는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건기에도 차량 운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도로망 신설 및 포장에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는



고속도로 및 교량의 신규 건설과 기존 도로의 포장 실시를 위해 EDCF와 미주개발은행(IDB)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사업범위 중 EDCF의 지원 내용은 Pailon 지역 Rio Grande 강에 연장 1.4km의 2차선 교량 및 4.4km의 접근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해당 지역은 자동차 및 보행전용 교량이 없어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 동안 철도교에 판자를 깔아 차량 및 주민이 양쪽방향에서 일정한 시간간격(약 30분)으로 통행하는 실정으로, 교량 건설이 매우 시급한 상태였다.

이 교량 건설로 교량 양측에 위치한 Pailon과 Pailas 마을 간 이동 소요시간이 약 3시간에서 약 1분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운송비용 절감 및 물류이동 증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감소하였다. 또한, 교량 건설 후 사업대상지가 속한 Santa Cruz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교량 주변에서 대규모 목축업이 이루어지는 등 해당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칠레의 Arica항과 브라질 국경 Cromba지역을 잇는 교통망이 확보되어 대외교역 증진효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ODA 활동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 1차



세네갈은 지리적으로 감비아(The Gambia)가 세네갈 중부지역의 서쪽 해안부터 중동부 내륙까지 가로막고 있어 세네갈 북부와 남부간 육로를 이용한 주민과 물류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다. 특히, 2002년 9월 수도 다카르(세네갈 북부)와 카자망스(세네갈 남부) 지역을 운행하던 카페리 '줄라'호의 침몰 참사 이후 2008년 초까지 해상교통이 단절되어 카자망스 지방의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해상 교통망 확충에 대한 EDCF 차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사업 중 EDCF의 지원 내용은 카페리 2척 건조, 접안시설 및 여객터미널 건립, 냉동창고 건립 등이었다. 당시 다카르 및 카자망스 지역에는 약 450인승 규모의 카페리 1척이 주 1~2회 운항하고 있었으나, 운송능력이 크게 부족

하여 여객 및 농수산물 수송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EDCF는 카페리 2척을 투입해 운송능력의 확충과 함께 운항횟수를 대폭 늘려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농수산물을 적기에 운송하고 지역 주민의 교류증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거점항구인 Dhakonga 및 Foundiougne 항에 각각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을 신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였다.

이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도권과의 육상교통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세네갈 남부 카자망스 지역의 항만 개발 및 현대화 등을 통해 여객 및 화물운송, 무역 촉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도서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세네갈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안정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사업



베트남 하노이 시의 동쪽에 위치한 하이퐁 시는 베트남 제일의 항구도시이자 주요 공업도시로, 국내 항구들과의 교역은 물론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아세안과 전 세계를 잇는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하이퐁항은 베트남 북부 최대 항만으로 베트남 전체 항만 물동처리량의 10~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노이와 하이퐁을 연결하는 기존 5번 국도의 교통량은 이 지역의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전체 구간(105.4km) 중 7구간(9.3km) 및 10구간(9.1km)에 대해 EDCF 차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베트남 북부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가중되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EDCF 차관 2억불(7구간 1억불, 10구간 1억불)을 지원하였다.

2009년 착공을 개시하여 2015년 전 구간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하노이-하이퐁 구간을 잇는 도로는 왕복 6차로, 설계속도 120km/h의 국제수준 고속도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근 지방 및 배후지역의 급증하는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하이퐁과 타 지역의 경제 중심지 간 수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업 이전에는 하이퐁에서 수도 하노이까지 2시간 이상 걸리던 소요시간이 사업 이후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도로분야의 우리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교통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경제협력 확대 및 이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주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ODA 활동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캄보디아 정부는 산업화 정책에 필요한 기술 인력공급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을 양적으로 늘리고 있었으나,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는 양질의 직업훈련 기관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사업추진 당시, 국립직업훈련학교 교육생들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었고 교육생들에 대한 공공기관 취업보장이 줄어들면서, 신규 입학생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감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신규 직업훈련원의 건립·운영을 통해 산업화 정책에 부응하는 숙련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되었다.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EDCF는 2005년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시 도심으로부터 북서쪽 8km에 소재한 당코르 지역에 기계, 전기, IT·전자, 건축, 관광 등 5개 훈련학과를 지닌, 총 정원 1,380명 규모의 2년제 신규 직업훈련원(NPIC,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을 건립하였다.

2011년 사후평가시 졸업생 취업률이 87%이상이었으며,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85%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 예산도 연간 10%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NPIC는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기자재를 갖추어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캄보디아 내 직업훈련기관의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었으며, 수도 프놈펜 산업현장의 숙련된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의 품질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써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완공 후에도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다양한 국내외 교육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

미얀마는 1962년 도입된 사유재산제도의 폐지, 계획경제의 도입, 패쇄적·자급자족적 고립경제체제의 '버마식 사회주의'에서 1988년 신군부 집권이후 외자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으며, 반세기만에 처음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2011년 이후 세계경제 체도권 편입을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



미얀마 현지 역량강화 연수 세미나

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경제정책도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기구와 민간 연구기관으로부터 정책연구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연구 및 정부 역량강화를 담당할 국책 정책연구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2년 5월 한-미얀마 정상회담에서 떼인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이 미얀마의 사회경제개혁 지원과 경제구조변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위해 미얀마개발연구원(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MDI) 설립을 요청하였으며, 2012년 10월 떼인세인 대통령 방한 시 양국은 MDI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리 정부는 본 사업에 앞서 KSP 정책자문사업을 통해 MDI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KOICA가 실제 설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MNPED)가 협력총괄부처로 참여하여, 2013년에 수행한 KSP 정책자문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KSP 사업의 정책제언을 기초로 연구의 독립성과 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미얀마 대통령실 직속기관으로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주요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한 'MDI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이 2014년 3월 발표되었다.

정책자문사업 이후 KOICA에서는 약 230억원 규모의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 (2015.2월~2019.8월)을 추진 중에 있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포함하여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역량강화 등을 통한 미얀마 경제발전정책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 경제발전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역할을 벤치마킹하여, 미얀마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의 정책역량 배양 및 농촌 지도자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싱크탱크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무상협력 분야

우리 정부는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개발을 도모하고, 사회·환경·경제 등 다분야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를 무상협력의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지역과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 노력 지원을 강화하여 평화번영 달성에 일조하고, 환경·여성·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OECD DAC의 권고사항,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등 국제적 추세에 따른 효율적인 무상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도주의 성격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개발환경과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무상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를 통해 국가발전과 빈곤퇴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 개발도상국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연수 사업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봉사단을 파견하여 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IT 등의 분야에서 현지형 밀착 지원을 실시하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WFK: World Friends Korea)으로 매년 5천여명의 봉사단원이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업형태 다각화를 통해 무상협력의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력대상국의 개발계획 달성에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프로그램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 자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의 무상협력 사업은 대부분 KOICA가 시행하지만,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의 중복 집행이나 산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제안사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개별 부처와 KOICA 간의 협력체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대상국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KOICA의 개발컨설팅 사업을 DEEP 프로그램으로 브랜드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보다 체계적인 전략과 원칙을 가지고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컨설팅 사업(DEEP)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면서도 한국의 개발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기반 ODA사업에 대한 관심 및 요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부응하고 기존 기술협력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KOICA는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DEEP은 지난 20여 년간 KOICA가 수행해 온 정책자문,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등의 기술협력사업을 ‘개발컨설팅 사업(DEEP)’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통합·확대한 것이다.

DEEP은 기술협력을 주 투입요소로, 협력대상국과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여,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기술 자문, 제도 구축, 인프라 구축연계 및 인적자원개발이라는 4가지 사업유형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DEEP은 협력대상국의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ory)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및 NGOs 등과 같은 다른 공여기관과 협업(harmonized)을 지향하고,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개발수요를 포괄적(comprehensive) 방식으로 접근하며, 상호책임성(mutually accountable)과 사후결과(results-oriented)를 중시한다는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나라 ODA 활동

수단 주혈흡충 및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

주혈흡충증은 오염된 민물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질병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열대병 중 하나이다. 수단은 약 3,500만 인구 중 80%가 주혈흡충증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약 80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75년 이집트에서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아스완(Aswan) 댐의 건설은 주혈흡충의 중간 숙주인 달팽이류 개체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하였고, 이집트, 수단 등 나일강 유역 국가들에서 주혈흡충증 유병률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KOICA는 수단 백나일강 인근 지역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0만불 규모의 주혈흡충 퇴치 사업을 두차례에 걸쳐 시행, 약 37만 명의 주민·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주혈흡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백나일강 인근에 5개의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약 4만 명이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약 33만 명의 주민에게 구충약품을 투약하였다.

그 결과, 사업대상지역에서 사업을 착수할 당시 29.2%의 감염률을 보이던 주혈흡충 양성률이 사업 마무리 시점에는 5.6%로 감소하여 사업초기대비 80.8%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혈흡충 예방교육을 받은 주민·학생·지역보건인력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혈흡충증의 감염원, 원인, 증상에 대한 인식이 교육 전보다 제고되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7월 31일에는 수단 카르툼에서 이 사업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WHO, SCI 등과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고, 현재 KOICA가 진행 중인 “수단 주혈흡충 퇴치 3차 사업(2015-2018/600만불)”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협의하였다.

특히 이번 3차 사업에서는 수단 전국을 사업 범위로 확장하여, 1987년 이후 28년간이나 실시되지 않았던 전국단위의 주혈흡충 감염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단 주혈흡충증 로드맵(Road-map)을 작성하여 향후 수단정부의 주혈흡충증 퇴치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단 18개 주 보건부 및 12개 거점 기생충검사실에 검사용 장비를 제공하여 이 사업 종료 후 수단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ODA 활동

가나 동부지역 기초교육환경 개선사업



가나는 지역 간 학력 및 교육의 질 격차가 큰 국가이며, 사업대상지역인 Kwahu North와 Fanteakwa District는 가나 동부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농촌지역이다. 이 지역은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교사의 비율이 60% 미만이고, 중등학교 진학을 위한 자격시험 합격

률이 50%에 그칠 정도로 교육환경 및 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KOICA는 가나의 동부지역 기초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8개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건물 및 교사숙소를 신축하여 가나 동부 2개 낙후지역에서 초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 지역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0명의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2년간 교사교육을 지원하고, 정규 교사 1,400명을 대상으로 교수법 보급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교보재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가나 동부 2개 지역에서 양질의 교사가 배출되었으며, 교육환경 중 특히 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해 여학생들의 학교 등록율이 증가하였고, 사업대상지인 아망과톤루 중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결과를 나타내는 기초학업시험(Basic Education Certification Examination) 합격율이 85%이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지방지역 교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신규 양성된 정교사들을 4년 동안 낙후지역에 체류하게 하여 이 지역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등 우수한 사업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ODA 활동

키르기즈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

지난 2013년 양국 정상회담시 키르기즈 정부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한국의 선거자동화 시스템 지원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KOICA는 선거자동화 시스템 개발, 선거운영 역량강화 실시, 광학판독개표



기 보급 등을 위한 키르기즈공화국 선거역량 강화사업('14-'16/615만불)을 실시하였다. 당초에는 한국측이 비슈켈과 오쉬 지역 시범적으로 추진(270개 투표소, 710대 광학판독개표기)하고 키르기즈측이 선거 IT를 시행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성공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키르기즈 정부의 자체 예산(약 920만불) 투입 되면서 국가적 프로그램(2,374개 투표소, 2,900대 광학판독개표기)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사업지원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선거사업 참여의사를 잇따라 밝혔으며, UNDP의 선거정책 자문, EU는 선거참관 및 감시, 미국의 선거캠프 개최, 한국은 선거 투표표 자동화, 일본은 선거인명부 전산화 등의 원조 분업과 공조가 형성되었으며, 후발 주자인 스위스는 KOICA의 선거자동화 사업에 61만불의 예산지원으로 동참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외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OICA, 세계선거기관 협의회(AWEB)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공동대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총선은 기존 수기 자료 입력방식이 아닌 100% 자동화로 선거가 진행되어 선거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며, 2010년 총선 대비 개표 시간이 2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고, 개표 정확성이 98% 수준으로 향상됨으로써 키르기스 국민들의 선거 신뢰도가 82.2%으로 향상되었다. 키르기스 국회는 2016년 독립 25주년을 맞이하여 25개의 기념비적인 사건 중 하나로 <2015.10.4 총선>을 선정하면서 '키르기스 공화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총선을 치렀다'고 평가하였으며, 국제 언론(BBC, 파이낸셜타임즈, 가디언, 알자지라 등)들도 '중앙아시아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코트디부아르 여성누공 치료 및 예방사업



산과적 누공 또는 여성누공은 출산시 난산으로 태아가 질 벽이나 방광, 직장항문을 오랫동안 눌러서 질과 방광 또는 질과 직장 사이에 누공(구멍)이 발생하는 것으로, 배설물이 의도하지 않게 배출되는 질환이다. 여성누공은 모성사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런 난산을 겪는 동안

태아가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성 누공의 원인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의 출산, 여성할례(FGMC: 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Cutting), 조기출산이다. 따라서, 조혼 및 조기출산과 여성할례를 비롯한 해로운 전통 관습의 방지, 시기적절한 산전검사와 개선된 의료환경에서의 분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그러나, 전세계 여성누공환자의 95%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연간 50,000에서 100,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 여성누공 환자들은 평생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웃과 가족, 배우자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육체적 고통보다도 여성으로서 존엄성을 잃게 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큰 질환이라고 하겠다.

코트디부아르는 모성사망률이 100,000명 당 720명(2013년)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506명) 보다도 훨

신 높다. 코트디부아르에 약 8,000명의 누공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누공환자는 질병의 특징상 환자가 질병을 알리기를 꺼려하여 통계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유병율은 더 높음), 매년 1,000여명의 새로운 누공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코트디부아르의 낮은 시설만율과 여성문해율(38.6%이하), 높은 여성할례 시행율(36%)과 조혼율(25-45세 여성 중 50%가 18세 이전에 결혼) 및 청소년 출산율(1,000명당 111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KOICA는 오랜기간 동안 여성 누공치료사업의 경험이 있는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과의 협업으로 2010-2015년간 여성누공 치료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으로 1,208명의 누공환자에게 수술적 치료를 제공하였고, 수술 후 260명의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소득창출활동을 지원하였다. KOICA의 사업이 알려지면서 사업지내의 환자들은 물론 타지역 및 말리, 기니,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등 인근국가로부터 환자들이 찾아와 수술을 받게 되었다.

KOICA는 1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사업(2016.1.6~2018.12.31)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더 많은 누공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누공환자의 치료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예방을 위하여 2차 사업에는 모자보건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의식개선 및 행동변화 활동을 포함시켰다. 2차 여성누공 치료 및 예방사업의 전략 목표는 ① 누공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누공환자 1,200명에게 수술적 치료 제공, 치료 복귀자 중 500명에게 소득 증대 사업 지원), ②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보건시설 개선 및 기자재 지원, 모자보건 의료 인력 역량강화), ③ 지역사회기반 가족계획 사업, ④ 인식 개선 캠페인과 "husband school" 등을 통해 누공에 대한 지역주민 행동 변화 유도, ⑤ 누공환자 교육, 홍보, 지역주민 인식개선 등 목적에 맞는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이다.

여성누공 치료 및 예방 사업은 의료적 치료를 넘어서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게 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사업은 KOICA의 수많은 프로젝트 사업 중 유일한 여성누공 치료 사업으로서 의의도 크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개발도상국의 여성누공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가 제고되고, 코트디부아르의 여성과 소녀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ODA 활동

라오스 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라오스 국립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9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이중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1950년대 미국 지원을 받아 추진된 미네소타 프로젝트- '의과대학 중심 중장기적 의료교육 체계 구축 및 인적역량 강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국립의과대학의 교수 및 교육병원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의과대학 의학교육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 필요한 실습 및 교육기자재지원, 우

리나라 자문관 파견을 통한 컨설팅,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공동학술논문게재 및 연수생들의 번역·저술서 발간, 연례 국제포럼 등 학술·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사업을 통해 라오스 의과대학의 의료지식 및 임상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과대학생들의 전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교수진에게도 적극적인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속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소아암에 관련 연수를 받은 라오스 아동병원 의료진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연수기관과 협진을 진행하면서 소아암 환아들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취약국 지원

국제사회는 취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15년을 이끌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체제에서 취약국 지원 성과는 특히 저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취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 및 제도 구축에 관한 목표(SDG 16)’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반영하였고, OECD는 취약국의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면적 취약성 분석 틀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선진 공여기관으로 영국의 국제개발부(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원조의 약 50%를 취약 지역 및 국가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도 총 재원의 55%를 취약국 및 최빈국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취약국 지원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취약국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에서는 취약국의 문제를 크게 ▲분쟁 및 폭력 ▲재난 ▲제도 미비로 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별 취약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및 소외 취약국에 대한 포용적 지원 강화 ▲다양한 사업 방식을 활용한 효과적 지원 수단 마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파트너십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평화구축-인도적지원-개발원조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OICA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양 측면에서 모두 소외된 취약국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분쟁·취약국 예산'(2017년 약 108억원)을 별도로 마련해 '취약국 지원 중기이행전략(2017-2019)' 및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운영 방안'에 따라 집행 중이다. 한편 EDCF에서는 '취약국 지원 원칙 및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수원국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WB)에는 2009년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 신탁기금(Korea Trust Fund for Economic and Peace Building Transitions)'을 설립하여 미얀마, 남수단 등 정치·경제체제 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사회 기본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국 정의

취약국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대표 기관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OECD는 기존의 취약국 정의를 수정하여 분야별 취약성에 기반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취약국은 사회·정치·경제·환경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대응·관리 역량이 부족한 국가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소득과 국가 정책, 제도 평가 지수, 물리적 폭력 및 평화 유지군 주둔 등을 취약국의 특성으로 고려하고 있다. DFID는 정부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를 취약국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USAID는 취약성을 국가와 사회 간 관계에서 효과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실패한 정도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동향

MDGs 체제에서는 취약국의 개발성도가 저조하여 극도의 빈곤이 취약국에 집중되었다. 실제, 약 43%의 절대 빈곤이 취약국에 집중되었고 약 2/3의 취약국이 빈곤 감소에 실패하였다. 구체적으로 IDPS(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에 의하면 1) 현재 지구상의 인구 중 15억명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2) 취약국의 약 70%가 1989년 탈냉전 이후 분쟁을 경험했고, 3) 2011년도 공적개발원조의 38%가 취약국 맥락에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MDGs 달성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에서는 지금의 추세로 미루어 봤을 때, 2030년에 세계 인구의 50%가 취약성을 경험하는 국가에 집중되어 극단적 빈곤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MDGs 체제의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는 SDGs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취약국 문제 해결을 꼽고 있다. 이에, SDGs 체제는 비소외원칙(Leaving no one behind)을 강조하고, 'SDG16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도모,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보장,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구축'을 채택하여 취약국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UN 차원에서의 취약국 문제 해결 노력과 더불어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 또한 진행되어 왔다.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국제사회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채택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취약국의 국제개발목표 달성 및 평화구축 등을 위한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 10월에 뉴딜에 가입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 논의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카타르 재단과의 학교 밖 아동 사업

전 세계에 학교 밖 아동 수는 약 7,500만이며, 그 중 약 35%가 취약국 등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학교 밖 아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2015년 5월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카타르 재단과 학교 밖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3년 간 양 기관이 각각 1,000만불씩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2015년 10월 카타르재단이 제출한 후보 사업 중, 우리 정부의 취약국 지원 대상국, 국제기구 지원 상징성, 사업의 혁신성을 감안하여 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UNHCR은 2015년부터 3년 간 이란 내 거주하는 3만명 학교 밖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수준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간단체 Phaung Daw Oo Monastic School(PDO)는 3G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 밖 아동 교육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미얀마 내 7만2천명 학교 밖 아동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 NGO United World Schools (UWS)은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3국의 소외지역에 163개 학교를 신축하고, 지역교사를 양성 및 교육하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밖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하고 중도포기율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2016년에는 KOICA 주도로 우리 민간단체를 통한 카타르재단과의 2차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였다. 2차 지원사업 공모에서는 KOICA 사무소 소재 국가 및 카타르재단의 중점협력국 중 OECD DAC 기준 분쟁 취약국을 우선 고려하였다. 사업내용적 측면에서는 주요 사업수혜대상으로 여아를 40%이상 포함하고,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소녀에 집중한 활동에 투입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국내에 소재하는 학교 밖 아동 관련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들이 공모에 참여하였고, 2016년 8월에 월드비전이 최종 선정되었다. 월드비전은 KOICA와 카타르재단으로부터 각각 214만불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107만불을 분담하여 우간다 북부 카라모자 지역에서 학교 밖 아동 4만명의 학교 등록률을 개선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3년 간 수행할 계획이다.



용어해설

카타르재단 카타르재단은 2012년에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간, 사회, 경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카타르 국왕의 모친이 설립하였다. 연간 예산규모는 1억 달러 규모로 특히 교육분야에서 학교 밖 아동들의 초등교육 지원, 교육권을 위협하는 다양한 안보 및 분쟁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정책, 연구 및 애도보커시, 팔레스타인 가자 및 서안 지구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UNESCO, UNHCR, Save the Children, CARE, Norwegian Refugee Council, British Council, USAID, BMZ, Islamic Development Bank, Vodafone Foundation 등 UN 산하 국제기구, 국제 NGO, 타국 정부 소속 원조기관 및 민간재단과 다양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아프가니스탄 평화구축 지원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대 말부터 계속되는 내전과 분쟁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국으로서,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으로 해외 원조의 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재건복구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왔다.

그간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교육, 보건, 거버넌스,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등의 분야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 학교 건축을 통한 교육접근성 제고사업을 지원하여 아프가니스탄 3개 주에 25개 학교를 건축 중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약 24,000여명의 아동들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아웃리치팀을 파견하여 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사업 환경을 감안할 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위험요소 관리 등 제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경제·사회 분야 지원의 경우, 국내 상황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 보건, 거버넌스, 농촌개발, 양성평등, 인도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방글라데시 재난대응역량강화 지원

취약국에서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부재, 기저재 부족으로 재난발생시 피해규모가 크다. 우리나라 ODA는 재난관리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앞 재난구조선 구축, 안전정보화시스템 구축, 소방기자재 공급, 제방축조, 역량강화 등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대표적인 재난 취약국중 하나로, 국토가 삼각주 지형이고 열대성 폭풍으로 홍수피해가 잦다. 이에 더하여 내륙수운 의존도가 높아 매년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 있지만 설비 노후화 및 인양능력 부족으로 재난구조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방글라데시 앞 바지선, 예인선 등 재난 구조선 구매사업(32백만불)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내륙수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상통신국 및 해상조난안전시스템 구축사업(14백만불)*을 지원하였다. 지원당시 방글라데시 정부는 통신시스템을 현대화하지 못하여 인접국인 인도로부터 자국 해역내의 조난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동 사업으로 자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재난 구조선 활동

* 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GMDSS")은 선박사고 시 조난정보를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의 인공위성을 통하여 수색구조기관에 신속히 전달

3) 다자협력 분야

우리 정부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양자차원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다자협력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 정부의 다자협력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우선, 다자협력을 양자협력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상호보완성과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국 및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다자협력의 내실화 도모 및 다자기구 운영의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인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UNDP(빈곤퇴치, 거버넌스, 농촌개발 등), WFP(식량안보, 농촌개발), UNICEF(아동교육, 보건), WHO(보건), UNHCR(인도적 지원, 난민)을 5대 UN 중점협력 대상기구로 선정하고, 각 기구별 전문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자원조와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우리 정부의 UNHCR 기여액이 2천만 불을 넘어섬에 따라 주요 공여국 그룹의 하나인 'UNHCR 2천만불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분담금 납부체계 개선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상협력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다자협력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간 조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다자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다자기구의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6년도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의장국으로 활동하여, 여타 공여국과 함께 주요 국제개발 다자기구의 조직 효과성에 대한 공동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발협력 평가 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역시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면서, 기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는 연간 약 3,600억 원 수준(2017년도)으로 세계은행 등에 대한 출자·출연이 주를 이룬다. 우리 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내 우리나라의 위상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이미 약정된 납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출자·출연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인도적 지원 분야

분쟁 및 자연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 노력은 우리나라 무상협력의 중요한 지원목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UN 결의안(A/RES/46/182) 및 선진 인도지원 공여국 협의회(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서 인정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원칙(인류애(humanity), 공정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GHD 원칙 제6조의 ‘필요에 우선한 지원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 발생 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가 혹은 피해 규모의 최소화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경우 우선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난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는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3월,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범위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14년 개정)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에는 「해외 긴급구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인도적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 활동 및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중견국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재건복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인 사회 안정과 개발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시리아 사태로 인한 대규모 난민 이동이 시리아 주변국의 경제·사회 부문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 지원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도적 지원과 개발간의 연계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의 유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재난 대비,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담당 부서와 개발협력 부서 간의 업무협조 및 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편,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예산 신설을 통해 분쟁상황 이후 초기 복구 및 재건, 제도 및 공공서비스 강화, 재난 및 기후 변화 복원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 비교우위 분야 발굴 및 집중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ODA 활동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최근 국제사회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강제이주인 규모가 6,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가 연대감과 책임의식을 발휘하여 난민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 정부의 난민 지원 규모는 2012년 350만 불 수준에서 2016년 5,129만불로 5년간 1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6년 2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 최대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는 시리아 및 주변국을 위해 총 4,500만 불(개발협력 포함) 규모의 지원을 공약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공약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6년 5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및 2016년 9월 「난민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약속하였다.



2016년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우리나라 ODA 활동

해외긴급구호 활동

에볼라 및 네팔 긴급구호대 파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외 재난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우리는 피해국 정부의 요청, 피해국 정부의 재난 대응역량,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구호는 양자 혹은 다자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현금·현물 제공 혹은 구호대 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에볼라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고조되었던 2014년에는 에볼라 발생 중심지인 시에라리온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여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동시에 효과적인 에볼라 대응을 위하여,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등에 총 1,760만 불 규모의 재정 및 물품 지원을 병행하였다. 2015년에는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여 네팔 군경 및 다른 나라 긴급구호대와 함께 탐색구조 및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ASEAN, ARF, EAS,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회의 등 해외긴급구호 관련 지역·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차원의 재난대응 도상훈련 및 모의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에는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증평가에서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 구조팀이 2011년에 이어 최상위등급(“Heavy”)을 획득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해외긴급구호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2018년간 태국과 함께 아세안지역포럼(ARF) 재난구호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on Disaster Relief) 공동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며,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재난 대응 및 구호 선진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정부는 해외 긴급구호에 있어 민간 간 공조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년 단위로 10여개의 국내 인도적 지원 역량을 보유한 단체를 선정하여 인도적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의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우리 NGO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알리고 국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 NGO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행사, 각종 인도적 지원 자료 출간 및 배포 등 대국민 인식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인도적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발생 시점이 지나 소외되고 잊혀진 재난에도 우리 NGO가 적극 대응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지원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네팔 재건 복구 지원



우리 정부는 네팔 대지진 발생 2일 후인 2015년 4월 27일,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긴급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 47명으로 구성된 KDRT가 파견되어 네팔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현물지원으로는 총 37톤의 이재민 지원용 텐트와 담요, 의약품 및 소모품 등 총 50만불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초기 긴급구호 목적으로 우리정부는 국제적십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IFRC)에 30만불,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 OCHA)에 20만불을 지원하였다.

2015년 6월 우리정부는 네팔 내 공여국 회의에서 긴급구호 이후 네팔의 중장기적인 재건복구를 위해 1,000만불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약하였다. 중장기 재건복구 지원에서는 특히 민관협력력을 통해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이 녹아들게 하여 재건복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는 초기 지진피해 지역에서 잔해제거를 위한 중장비 수요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우리 정부와 두산인프라코어는 협업하여 2015년 8월에 160만불 규모의 굴삭기, 적재기 총 24대를 지원하였다. 중장비 지원에 있어서 네팔 지진피해 지역이 대부분 산간에 위치한 점과 좁은 폭을 가진 비포장도로가 주를 이루는 점 등의 현지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우리 정부는 네팔 중장기 재건복구를 위한 1,000만불 중 840만불은 네팔의 장기적인 취약성 완화를 위한 보건분야 복원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네팔정부의 '보건분야 지진피해 복구 중기전략'에 입각하고, 기존 우리 정부의 대 네팔 개발협력 경험에 기반한 경쟁력, 타국 정부의 네팔 지원전략과의 협업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였다. 여타 국가의 긴급구호대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UN측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임무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재난에 대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재건을 목표로 하는 '네팔 누와곳군 지진피해 보건분야 재건복구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2018년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재건하는 것이 사업기획의 주안점이었다. 세부 사업내용은 크게 1) 보건의료시설 복구 및 재건, 2)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역량 강화, 3) 사후재난 보건의료 프로그램 역량강화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우리정부는 사업활동별로 전문성을 가진 최적의 파트너와 협업구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첫째로, 보건의료시설 복구 및 재건 관련해서는 누와곳군 군립병원과 10개 보건소 재건이 진행중이다. 지진피해 보건의료시설을 철거하고, 잔해를 제거하고, 신규 보건의료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UNDP와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관련 건축기술을 교육하고, 각 과정에 지역주민들을 투입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개발도상국 주민 참여형 소득증대 프로그램



인 Cash-for-Work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둘째로, 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네팔 보건부와 보건 의료정보시스템 개편에 대해 협업중이었던 독일 원조기관 GIZ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팔 보건부, GIZ와 우리정부의 KOICA는 네팔 보건 의료서비스 데이터의 종이장부 기입 방식을 전자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시범지역으로 누와콧군을 선정하였다. 보건 의료시설 재건과 보건 의료정보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보건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기록관리, 통계정보 생산 기반 마련 뿐 만 아니라 네팔 보건부의 증거기반 정책결정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사후재난 보건 의료 프로그램 역량강화 부문은 보건 의료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취약 계층 및 사후재난 환경을 고려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초보건의료 뿐 만 아니라 재난 후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네팔의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올적인 운영, 기록관리, 통계정보 생산 기반 마련 뿐 만 아니라 네팔 보건부의 증거기반 정책결정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사후재난 보건 의료 프로그램 역량강화 부문은 보건 의료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취약 계층 및 사후재난 환경을 고려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초보건의료 뿐 만 아니라 재난 후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네팔의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4. 국가별 협력전략

우리 정부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원조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 ODA의 효과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무상별로 각각 별도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ODA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2010년에 'ODA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무상 별도의 중점협력국을 26개 중점협력국으로 통합 선정하였고 2013년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중점협력국 재조정을 검토하였고 수원국 발전 수준, 수원국의 거버넌스,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24개국으로 조정했다. 현재 24개 중점협력국은 지역별로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CIS 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협력전략(CPS)은 우리나라의 ODA 전략 및 협력대상국의 개발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지원 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국가별 ODA 지원 전략이다. 이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협력대상국에 대한 외교전략 및 개발수요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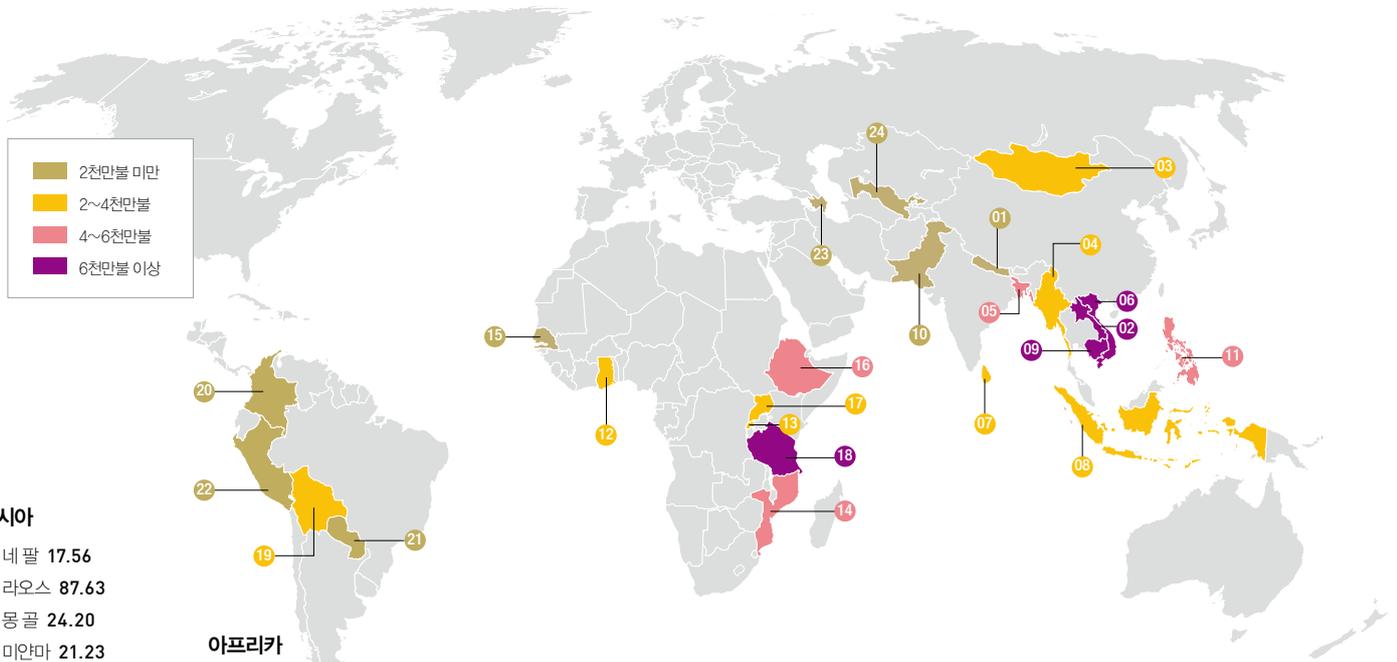
함으로써, 협력대상국별로 맞춤형 ODA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국가별 협력전략의 이행을 통해 정책과 집행의 일관성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에 맞춰 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24개 중점협력국별 중점지원 분야

지역	국가명	중점지원 분야
아시아 (11개국)	네팔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교육 / 지역개발 / 에너지
	라오스	물관리 및 보건위생 / 에너지 / 교육 / 지역개발
	몽골	교육 /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공공행정 / 교통
	미얀마	공공행정 / 지역개발 / 교통 / 에너지 /
	방글라데시	교육 / 교통 / 물관리 및 보건위생 / 통신
	베트남	교통 / 교육 / 물관리 / 공공행정
	스리랑카	교육 / 교통 / 물관리 및 보건위생 / 지역개발
	인도네시아	교통 / 공공행정 / 환경보호 / 물관리
	캄보디아	교육 / 물관리 및 보건위생 / 지역개발 / 교통
	파키스탄	교통 / 에너지 / 물관리 및 보건 / 지역개발
	필리핀	지역개발 /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교통 / 재해예방
아프리카 (7개국)	가나	지역개발 / 보건위생 / 교육 / 에너지
	르완다	교육 / 지역개발(농촌개발) / 통신(CT)
아프리카 (7개국)	모잠비크	교통 / 에너지 /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교육
	세네갈	지역개발 및 수산업 / 교육 /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교통
	에티오피아	물관리 및 보건위생 / 지역개발 / 교통·에너지 / 교육
	우간다	지역개발 / 교육 / 보건위생
	탄자니아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교통 / 교육 / 에너지
중남미 (4개국)	볼리비아	보건위생 / 지역개발 / 교통 / 에너지
	콜롬비아	교통 / 산업 / 지역개발 / 평화구축
	파라과이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교통 / 지역개발 / 통신
	페루	보건위생 / 공공행정 / 환경보호 / 교통
중동·CIS (2개국)	아제르바이잔	통신 / 공공행정 / 물관리 / 지역개발
	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 / 교육 / 물관리 및 보건

※ CPS 원본은 ODA 통합 홈페이지(www.odakore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한국 ODA의 이모저모' → '국가협력전략')

우리나라의 24개 중점협력국



아시아

- 01 네팔 17.56
- 02 라오스 87.63
- 03 몽골 24.20
- 04 미얀마 21.23
- 05 방글라데시 52.16
- 06 베트남 217.16
- 07 스리랑카 27.46
- 08 인도네시아 39.55
- 09 캄보디아 66.85
- 10 파키스탄 5.74
- 11 필리핀 44.04

아프리카

- 12 가나 39.84
- 13 르완다 20.93
- 14 모잠비크 42.29
- 15 세네갈 10.31
- 16 에티오피아 46.02
- 17 우간다 22.95
- 18 탄자니아 71.29

중남미

- 19 볼리비아 20.62
- 20 콜롬비아 15.12
- 21 파라과이 11.54
- 22 페루 9.89

중동C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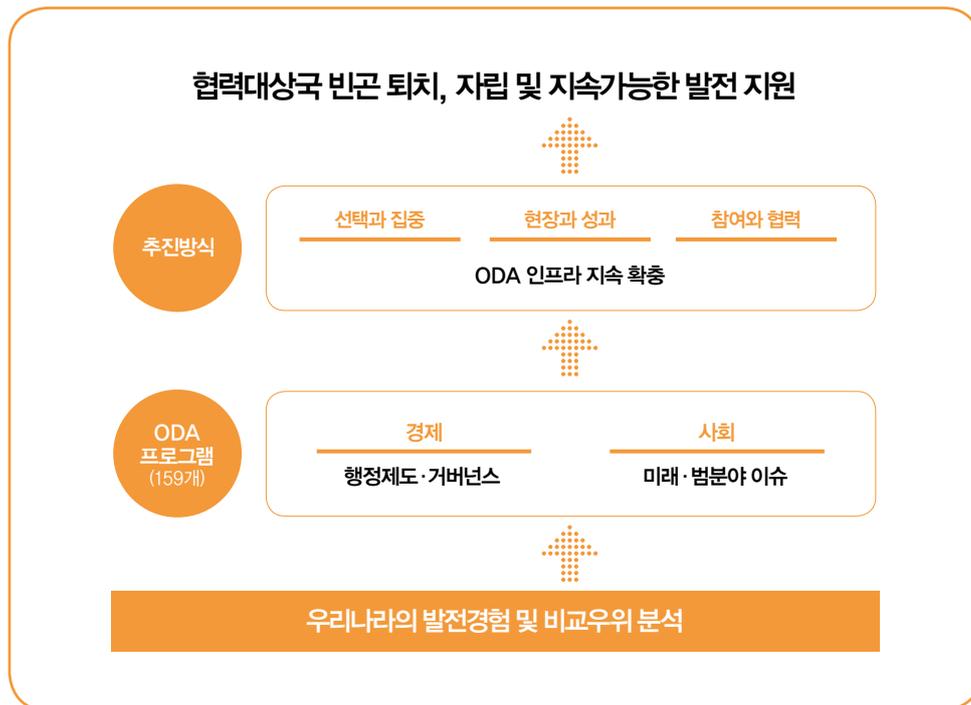
- 23 아제르바이잔 6.71
- 24 우즈베키스탄 14.96

(2015년 순지출 기준, 백만불)

5. ODA 콘텐츠

국제사회는 내전 및 피식민지배 등 개발도상국과 유사한 경험을 가졌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달성한 우리의 독특한 발전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 우리의 경험이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ODA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이자 강점인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2012년 9월에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수립을 통해 우리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ODA 콘텐츠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총정리하여 경제, 사회, 행정 제도·거버넌스, 미래·범분야 이슈 등 4개 영역에 대해 총 159개의 ODA 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하였다.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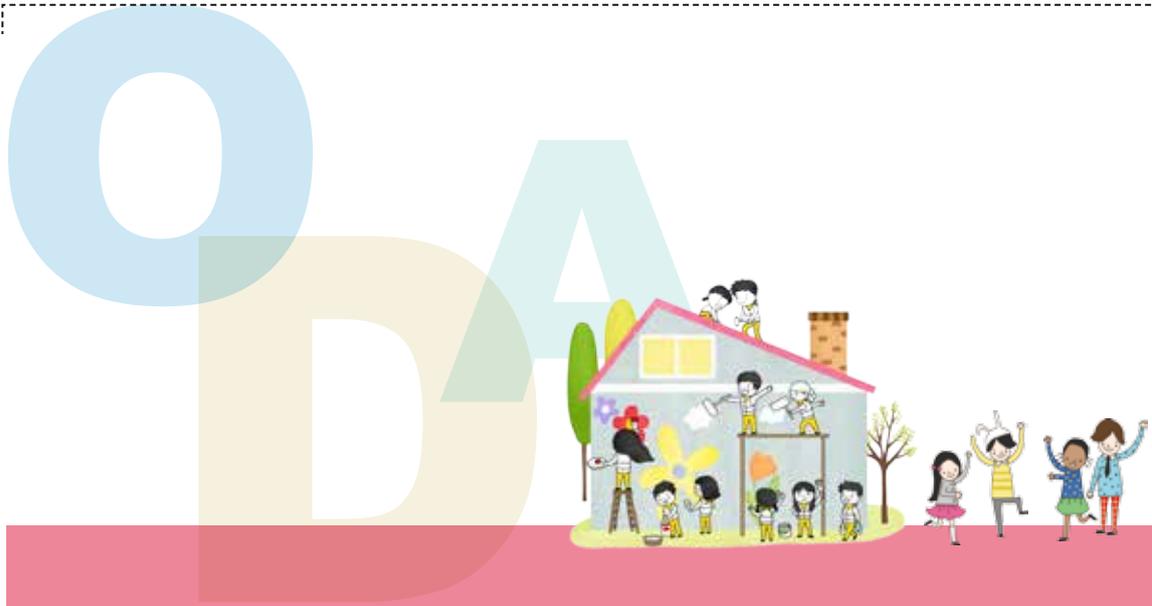


또한, 분야별·주요 시행기관별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발전경험상 ODA 추진 역량, 수원국 수요 등을 기준으로 기본 프로그램(40개)을 도출하는 등 시행기관이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 추진사례 및 교훈 등 관련 콘텐츠를 사업 수행에 참고하여 ODA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역별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 Pool







우리나라는 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간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지구촌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사회 개발재원의 양적 확대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의 2005년 ODA 지원 규모는 7억 5,232만 불이었으나,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ODA 절대규모는 순지출 기준 약 19억 1,539만 불로, 전체 29개 OECD DAC 회원국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의 현황 및 실적

1. 선진 공여국의 ODA 현황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05

제1절 선진 공여국의 ODA 현황



전 세계 ODA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OECD DAC 회원국들은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와 함께 ODA 효과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세계 빈곤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DAC 회원국의 ODA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선진 공여국의 ODA 실적은 물론 전반적인 ODA 운용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ODA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및 추이, 분야별·지역별·형태별 지원 현황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1. ODA 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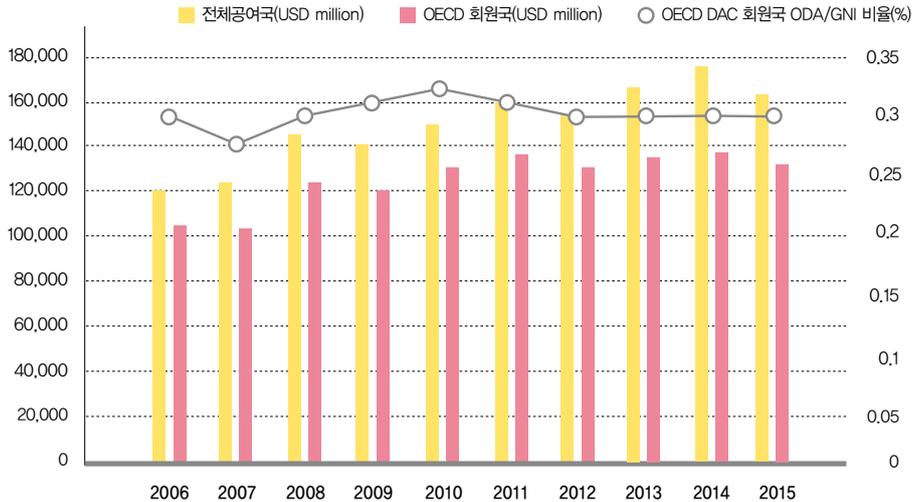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1,316억 불(순 지출 기준)을 기록했다. 2014년의 1,376억 불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2000년에 540억 불, 2006년에 1,056억 불, 2010년에 1,285억 불을 기록하면서 지난 1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ODA 절대규모 기준 최대 공여국은 미국(310억 불), 영국(185억 불), 독일(179억 불), 일본(92억 불), 프랑스(90억 불) 순이다.

전체 ODA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국의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2005년 이후 정체되어 있다. DAC 회원국의 평균 GNI 대비 ODA 비율은 2006년 0.3%, 2010년 0.31%, 2015년 0.3% 수준이다.

선진공여국의 ODA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공여국	120,243	122,168	144,422	140,152	147,644	161,248	150,614	167,062	178,595	162,739
OECD DAC 회원국	105,565	105,021	122,891	120,675	128,484	135,111	127,030	134,847	137,581	131,555
OECD DAC 회원국 ODA/GNI 비율(%)	0.30	0.27	0.30	0.31	0.31	0.31	0.28	0.30	0.30	0.30



2. 유형별 지원 현황

DAC 회원국의 전체 ODA에서 양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로 ODA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양자원조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자원조 역시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체 ODA 규모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OECD DAC 회원국의 양자·다자 원조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DAC 회원국	양자원조					다자원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94,827	88,467	93,458	94,808	94,212	40,284	38,563	41,389	42,773	37,343
호주	4,309	4,540	4,149	3,498	2,752	674	863	696	884	741
오스트리아	490	536	543	637	783	621	570	628	598	541
벨기에	1,739	1,433	1,307	1,319	1,112	1,068	882	992	1,127	793
캐나다	4,111	4,032	3,512	3,278	2,972	1,347	1,618	1,436	962	1,305
체코	77	66	57	63	70	174	153	154	150	129

DAC 회원국	양자원조					다자원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94,827	88,467	93,458	94,808	94,212	40,284	38,563	41,389	42,773	37,343
덴마크	2,144	1,922	2,135	2,131	1,880	787	771	793	873	685
핀란드	839	799	822	938	698	567	521	613	697	590
프랑스	8,495	7,929	6,801	6,514	5,157	4,503	4,099	4,538	4,107	3,882
독일	8,736	8,584	9,451	11,589	14,113	5,357	4,355	4,777	4,977	3,827
그리스	154	107	44	46	72	271	220	195	201	167
헝가리	33	22	34	30	47	107	97	94	114	108
아이슬란드	20	21	29	31	31	6	5	6	6	9
아일랜드	604	536	546	519	427	310	272	300	297	291
이탈리아	1,703	624	867	1,372	1,829	2,623	2,113	2,563	2,637	2,174
일본	7,198	6,402	8,499	6,129	6,147	3,888	4,202	2,970	3,355	3,055
한국	990	1,183	1,310	1,396	1,469	335	414	446	461	447
룩셈부르크	280	277	299	300	263	130	122	131	123	100
네덜란드	4,336	3,858	3,647	4,027	4,163	2,008	1,665	1,789	1,546	1,563
뉴질랜드	330	362	351	409	358	95	88	107	97	84
노르웨이	3,562	3,523	4,316	3,889	3,307	1,194	1,230	1,266	1,197	971
폴란드	91	112	127	82	100	327	310	360	370	341
포르투갈	477	397	303	246	146	231	184	186	184	162
슬로바키아	21	19	16	16	17	65	61	70	67	68
슬로베니아	19	19	21	20	25	44	39	41	41	38
스페인	2,282	985	945	464	355	1,891	1,052	1,403	1,413	1,042
스웨덴	3,651	3,638	3,918	4,343	4,828	1,952	1,602	1,909	1,890	2,262
스위스	2,371	2,454	2,506	2,779	2,726	680	599	695	743	803
영국	8,474	8,665	10,545	11,233	11,710	5,359	5,226	7,326	8,073	6,835
미국	27,293	25,423	26,360	27,509	26,654	3,673	5,230	4,906	5,586	4,331

OECD DAC 회원국들은 지난 10여 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양자원조의 1.4%를 유상원조에, 98.6%를 무상원조에 지원해 왔다. 총지출 기준으로 볼 때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그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3%였던 유상원조의 비율은 2007년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나, 2015년 기준으로 약 16:84의 유·무상원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용어해설

순지출 순지출은 전체 총지출에서 유상원조의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유상원조의 경우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게 되는데, 이 때 이자를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순지출이다.

OECD DAC 회원국의 유·무상 원조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연도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6	77,622	-2,758	-3.6%	80,380	103.6%
2007	73,735	-2,470	-3.3%	76,205	103.3%
2008	87,128	-1,383	-1.6%	88,511	101.6%
2009	83,968	2,450	2.9%	81,518	97.1%
2010	90,647	3,514	3.9%	87,132	96.1%
2011	94,827	1,585	1.7%	93,242	98.3%
2012	88,467	2,229	2.5%	86,237	97.5%
2013	93,458	764	0.8%	92,694	99.2%
2014	94,808	4,339	4.6%	90,469	95.4%
2015	94,212	5,393	5.7%	88,821	94.3%

※ 유상규모가 -인 경우는 유상원조 상환액이 지출액 상회

3. 분야별 지원 현황

OECD DAC 회원국은 2015년 기준 분야별 총 양자 ODA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약 34.4%를 교육,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지원 등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지원하였고, 다음으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약 18.8%, 인도적 지원에 11.2%, 다부문에 10%, 생산(산업)부문에 6.4% 순으로 지원하였다.

OECD DAC 회원국의 ODA 분야별 지원 현황 (약정액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6,169	44,562	41,919	42,960	40,638
교육	9,780	8,793	8,228	9,158	8,052
보건	6,012	6,160	5,961	5,328	6,077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8,076	7,495	7,421	8,814	7,839
수자원 및 위생	5,050	6,671	5,515	4,526	5,091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4,532	13,015	12,527	12,952	11,937
기타 사회인프라	2,720	2,428	2,268	2,181	1,642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6,998	17,974	20,836	22,156	22,235
교통 및 물류	6,099	8,535	9,406	7,938	8,809
통신	320	487	312	356	332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에너지	6,604	5,797	7,408	8,754	9,180
금융 및 재무서비스	2,229	2,215	2,465	2,954	2,675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1,746	941	1,246	2,153	1,239
생산(산업) 부문	8,390	7,829	7,596	7,786	7,601
농업·임업·어업	5,368	5,358	5,147	5,488	5,138
산업·광업·건설	2,036	1,597	1,460	1,454	1,805
통상정책 및 조정	886	800	904	797	610
관광	101	74	85	47	49
다부문	11,441	10,466	10,339	10,961	11,775
물자 지원 / 일반프로그램 원조	3,897	3,490	5,359	2,421	2,550
부채 관련 지원	4,391	3,068	3,550	643	418
인도적 지원	9,580	8,849	10,747	13,988	13,262
미배분	12,701	11,772	12,393	13,893	19,824
합 계	113,568	108,012	112,739	114,808	118,303

4. 지역별 지원 현황

OECD DAC 회원국의 지역별 공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많은 ODA가 지원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270억 불에 달한다. 특히 동아프리카 ODA 중 약 89%가 사하라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DAC 회원국의 지역별 총 ODA 지원 현황의 약 26%에 해당한다. 아프리카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는 총 233억 불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에 약 49%가 서남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아메리카 지역에 59억 불, 유럽 지역에 30억불 등이 지원되었다.

OECD DAC 회원국의 지역별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아프리카	32,523	30,271	30,068	29,275	27,063
사하라 이남	28,791	27,047	26,811	25,678	24,098
사하라 이북	2,467	1,877	1,992	1,712	1,383
아프리카 미배분	1,265	1,348	1,265	1,885	1,581
아시아	23,883	22,800	27,087	24,975	23,282
서남 및 중앙아시아	14,398	12,945	15,021	12,498	11,500
극동	3,926	4,195	3,786	4,181	3,707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중동	4,723	4,899	7,400	7,275	7,254
아시아 미배분	835	761	879	1,021	821
아메리카	7,683	6,603	6,321	6,504	5,909
중앙 및 북아메리카	3,894	3,033	2,697	2,608	2,493
남아메리카	3,174	3,145	2,911	3,412	3,001
아메리카 미배분	616	426	713	483	415
유럽	2,676	2,074	2,029	3,226	2,980
오세아니아	1,979	1,876	1,760	1,567	1,506
지역 미배분	26,081	24,834	26,192	29,262	33,473
합 계	94,827	88,458	93,458	94,808	94,212

5.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한편 DAC 회원국은 2015년 순지출 기준 총 942억 불의 양자원조 중 28.8%인 272억불을 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국에 지원하였다. 그 밖에 하위 중소득국에 17.2%, 상위 중소득국에 10.3%를 지원하였다.

2015년 OECD DAC 회원국의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국가명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소득미배분
호주	678.75	20.37	1,160.07	149.37	743.63
오스트리아	41.12	3.44	81.83	105.83	550.28
벨기에	377.36	14.67	121.97	73.55	524.06
캐나다	998.2	42.98	603.23	337.89	989.68
체코	11.5	0.23	16.85	13.6	27.92
덴마크	384.12	82.18	202.05	35.25	1,176.84
핀란드	235.75	24.24	72.06	41.58	324.23
프랑스	1,089.59	76.21	934.56	1,587.51	1,469.63
독일	1,602.64	109.36	2,972.22	2,673	6,755.76
그리스	1.15	0.06	5.48	4.79	60.4
헝가리	1.36	0.05	13.7	13.46	18.78
아이슬란드	12.91	-	2.07	1.52	14.55
아일랜드	256.74	15.9	41.22	15.43	98.2
이탈리아	280.25	22.03	177.71	146.62	1,202.75
일본	2,479.59	187.22	1,820.65	-492.78	2,152.74
한국	580.13	9.27	529.95	109.74	239.71

국가명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소득미배분
룩셈부르크	121.43	0.93	69.03	8.88	62.39
네덜란드	464.86	19.43	115.9	129.52	3,433.16
뉴질랜드	113.41	1.51	70.19	62.39	110.59
노르웨이	729.33	33.55	347.85	325.28	1,870.78
폴란드	44.25	1.08	38.88	-0.81	16.78
포르투갈	53.04	0.05	62.57	9.64	20.7
슬로바키아	0.93	1.38	4.44	2.64	7.81
슬로베니아	0.41	0.07	2.01	9.82	12.8
스페인	81.36	-3.78	63.35	-38.06	251.7
스웨덴	847.26	97.09	255.96	150.67	3,476.68
스위스	618.14	64.18	462.66	280.53	1,300.98
영국	3,815.28	399.2	2,032.87	802.45	4,660.23
미국	9,121.88	895.65	3,941.67	3,149.36	9,545.54
DAC 총계	25,042.73	2,118.53	16,223	9,708.69	41,119.31

제2절 우리나라의 ODA 현황



우리나라는 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간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지구촌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사회 개발재원의 양적 확대에 기여해 왔다. 또한 ODA 규모 확대와 동시에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ODA의 현황 및 특징을 규모·유형·분야·지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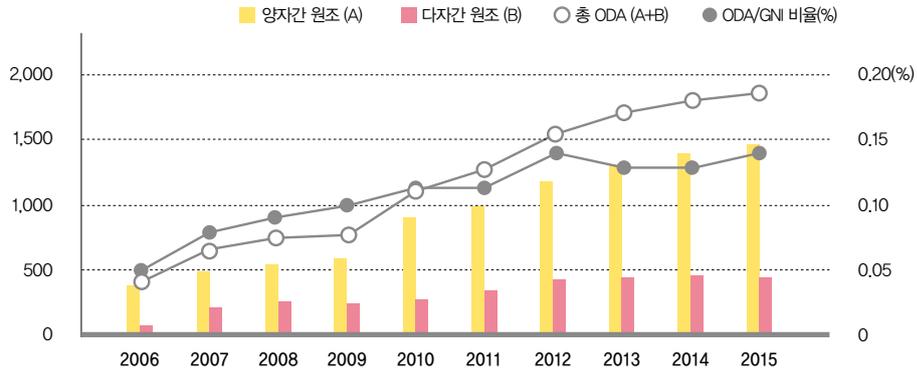
1. ODA 규모 및 추이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연도별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이후 연평균 약 17.3%의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 절대규모는 2015년 순지출 기준 약 19억 1,539만 불로, 29개 OECD DAC 회원국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는 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매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2014년에 대비 약 0.01%p 상승해 0.14%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지원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ODA (A+B)	455.25	696.11	802.34	816.04	1,173.79	1,324.59	1,597.45	1,755.38	1,856.73	1,915.39
양자간 원조 (A)	376.06	490.52	539.22	581.1	900.63	989.57	1,183.17	1,309.58	1,395.77	1,468.79
다자간 원조 (B)	79.19	205.59	263.12	234.94	273.15	335.02	414.28	445.8	460.96	446.6
ODA/GNI(%)	0.05	0.07	0.09	0.1	0.12	0.12	0.14	0.13	0.13	0.14



2. 유형별 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2015년도 순지출 기준 14억 6,879불을 양자원조에 배분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3억 9,577만 불보다 약 5% 증가한 규모이다. 양자·다자 원조의 배분비율은 2011년 75:25에서 2015년 77:23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무상원조에 전체 ODA의 64.2%를, 유상원조에 35.8%를 지원해 왔다.

유·무상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연도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6	376.06	117.11	31.14	258.95	68.86
2007	490.52	132.19	26.95	358.33	73.05
2008	539.22	170.55	31.63	368.67	68.37
2009	581.1	214.13	36.85	366.97	63.15
2010	900.63	326.74	36.28	573.89	63.72
2011	989.57	414.55	41.89	575.02	58.11
2012	1,183.17	468.29	39.58	714.88	60.42
2013	1,309.58	500.58	38.22	809	61.78
2014	1,395.77	512.12	36.69	883.65	63.31
2015	1,468.79	562.37	38.29	906.42	61.71

ODA 지원 규모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UN, MDB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규모는 2000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15년 약 4억 4,660만 불을 기록하였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per. Fund	0.41	-	-	-	-	-	-	-	-	-
AfDB	12.8	0.43	3.5	1.5	-	-	-	8	7	7
AfDF	-	14.53	14.57	12.79	14.41	28.53	29.13	30.62	31.54	30.1
기타	-	-	-	1.02	1.06	1.06	1.02	4.06	4.31	3.87
기타 국제기구	-18.29	14.4	11.81	17.2	18.46	25.85	19.69	35.11	33.41	44.22
IMF	-30.91	0.67	0.82	1.93	3.51	3.61	4.19	6.27	3	4
기타	12.62	13.73	10.99	15.27	14.95	22.24	15.49	28.84	30.41	40.22
총 다자간원조	79.19	205.59	263.12	234.94	273.15	335.02	414.28	445.8	460.96	446.6

3. 분야별 지원 현황

우리 ODA의 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015년 11억 1,907만 불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체 양자원조의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어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7억 6,022만 불(32.9%), 생산(산업) 분야에 1억 4,101만 불(6.1%)이 지원되었다.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보건 분야에 전체 양자원조의 11.8%, 교육 및 위생 분야에 각각 11.3%와 10.9%,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지원에 7.6%가 지원되었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0%, 에너지 분야에 4.2%, 통신 분야에 2.0% 순으로 지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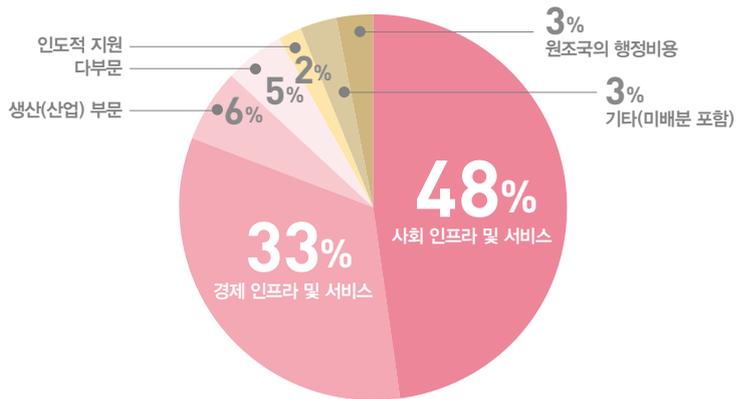
분야별 지원현황 (약정액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03.09	413.01	702.73	406.91	905.81	696.03	768.32	1313.95	967.08	1,119.07
교육	135.15	160.92	114.28	141.37	324.4	199.17	127.53	337.05	228.75	260.29
보건	38.56	112.02	240.34	151.42	131.31	158.83	187.65	306.96	292.65	273.67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0.5	1.56	20.68	3.77	5.06	3.01	11.04	23.76	5.6	31.99
수자원 및 위생	80.76	74.73	270.42	70.93	283.15	172.13	187.39	365.25	225.35	251.86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41.61	57.23	43.68	25.88	153.73	143.64	228.42	241.81	167.58	175.83
기타 사회 인프라	6.51	6.55	13.32	13.56	8.15	19.25	26.29	39.13	47.15	125.44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70.95	402.86	544.77	876.63	610.36	597.45	488.26	563.27	812.93	760.22
교통 및 물류	99.54	235.89	268.34	641.19	370.53	315.4	324.78	311.57	771.3	600.89
통신	65.25	88.24	91.53	114.86	49.3	73.22	103.51	87.14	25	46.62
에너지	4.98	74.6	182	119.18	184.84	206.12	56.85	159.82	8.84	97.96
금융 및 재무서비스	0.43	3.12	1.97	0.86	2.6	1.41	1.63	1.51	5.12	9.49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0.75	1.01	0.93	0.55	3.1	1.32	1.48	3.23	2.66	5.26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산업) 부문	33.5	129.7	78.69	58.51	100.43	159.01	291.15	142.23	256	141.01
농업·임업·어업	11.8	107.61	48.93	38.98	91.7	128.81	268.73	115.99	219.19	98.19
산업·광업·건설	17.36	12.43	19.59	17.08	6.55	21.96	15.74	16.51	24.64	32.02
통상정책 및 조정	4.14	5.79	9.65	2.1	1.9	7.81	5.47	8.64	9.55	9.21
관광	0.2	3.87	0.52	0.36	0.28	0.43	1.22	1.08	2.61	1.6
다부문	9.16	32.51	25.13	59.21	117.57	58.59	102.63	74.84	149.32	108.29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원조	0.22	0.34	1.55	0.08	-	1.9	1.98	0.02	1.06	1.99
부채 관련 지원	-	-	10.33	-	2.36	-	-	-	-	-
인도적 지원	24.62	35.63	56.08	14.39	20.72	21.21	16.64	36.84	72.92	44.19
원조국의 행정비용	25.31	31.54	31.51	27.76	38.39	53.6	59.4	57.26	56.91	65.63
기타(미배분 포함)	8.65	7.69	4.19	5.92	13.94	35.84	24.61	49.8	62.13	71.27
합 계	675.49	1,053.27	1,454.97	1,449.41	1,809.59	1,623.63	1,752.99	2,238.2	2,378.33	2,311.67

2015 분야별 지원현황 (약정액 기준, 백만 불)



4. 지역별 지원 현황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양자원조의 약 52.7%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아프리카 지역에 24.4%, 중남미 지역에 7.8%가 배분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 기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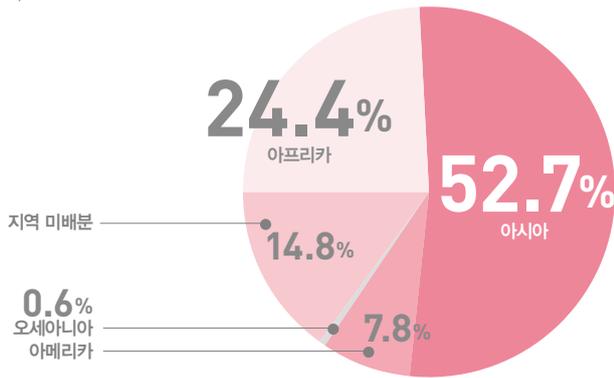
지역별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프리카	47.83	70.17	104.06	95.01	139.88	178.36	261.01	271.72	332.72	358.76
사하라 이남	38.85	52.56	86.3	74.7	117.21	148.96	230.8	250.98	313.33	341.48
사하라 이북	8.98	11.45	16.26	13.58	15.22	19.69	17.9	17.66	16.14	16
아프리카 미배분	-	6.16	1.5	6.73	7.45	9.71	12.31	3.08	3.25	1.28
아시아	227.59	299.99	281.37	313.45	587.29	625.13	679.92	771.72	738.02	774.47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남 및 중앙아시아	71.45	66.26	61.03	95.96	283.91	232.62	240.32	300.92	257.98	203.93
극동	82.88	158.16	177.9	188.49	263.44	339.4	389.68	416.8	390.66	485.31
중동	71.79	70.66	30.54	21.37	34.29	41.26	42.25	40.6	74.63	66.35
아시아 미배분	1.47	4.91	11.9	7.63	5.65	11.85	7.67	13.4	14.75	18.88
아메리카	25.88	54.7	68.69	55.84	64.46	64.39	76.2	96.48	109.08	114.06
중앙 및 북아메리카	13.45	24.76	43.27	36.38	30.75	23.64	22.36	27.47	40.02	43.79
남아메리카	12.43	29.94	25	18.4	33.64	40.75	53.2	68.68	68.54	69.59
아메리카 미배분	-	-	0.42	1.06	0.07	-	0.064	0.34	0.52	0.68
유럽	31.11	16.91	12.89	46.36	38.72	20.65	16.56	2.58	9.96	-4.42
오세아니아	1.17	3.72	2.22	1.53	5.6	4.15	3.42	3.92	6.48	8.8
지역 미배분	42.48	45.05	69.99	68.91	64.68	96.89	146.06	163.16	199.51	217.11
합 계	376.06	490.54	539.22	581.1	900.63	989.57	1,183.17	1,309.58	1,395.77	1,468.79

2015 지역별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5.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소득그룹별로는 2015년에 총 양자원조의 39.5%가 최빈국에 배분되었으며, 하위중소득국에 36.1%, 상위중소득국에 7.5%가 지원되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최빈국 및 기타저소득국, 특히 고채무빈국에 대한 원조를 늘려왔다. 전체 양자원조 가운데 최빈국을 포함한 기타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은 40.1%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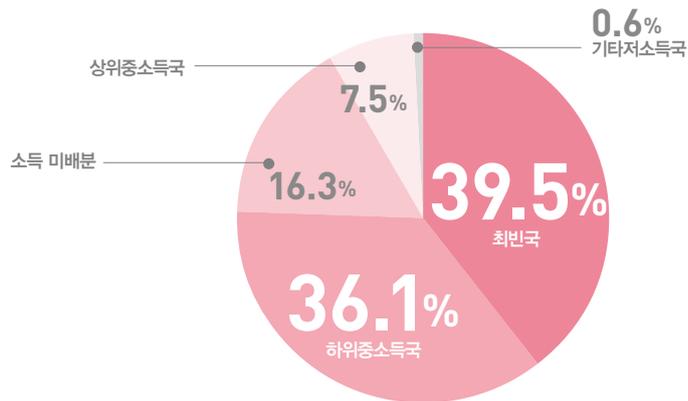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양자간 원조	376.08	490.54	539.21	581.1	900.61	989.52	1,183.17	1,309.58	1,395.77	1,468.79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최빈국	91.95	120.66	143.47	161.02	333.26	346.73	417	515.31	542	580.13
기타저소득국	15.7	3.23	4.1	5.82	7.25	10.82	10.91	8.72	8.61	9.27
하위중소득국	102.86	185.05	194.34	222.3	354.81	366.58	472.51	502.4	485.79	529.95
상위중소득국	120.57	121.56	107.73	93.41	111.17	120.93	107.56	101.76	140.09	109.74
소득 미배분	44.74	59.5	90.49	100.48	96.22	144.46	175.08	181.28	219.28	239.71
수원국 졸업국	0.26	0.54	-0.92	-1.93	-2.1	-	0.11	0.1	-	-

2015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6. 중점협력국별 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에 비해 ODA의 절대규모가 작은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10년 유·무상이 각각 운영하고 있던 중점협력국을 26개국으로 통합한 후, 2015년 24개국으로 조정하였다.

2011년~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자 ODA 규모에서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은 절반 이상인 5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고 2015년에는 59.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베트남, 라오스 등 지원규모 기준 상위 10개국에 대한 지원이 76%에 이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최대 협력대상국으로 2015년 양자원조의 14.8%가 지원되었다. 뒤이어 라오스 6.0%, 캄보디아 4.5%, 방글라데시에 3.6% 등이 배분되었다.

중점협력국에 대해 양자원조의 70%를 배분할 계획임을 감안할 경우, 2015년 조정된 24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 집중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2015년간 26개 중점협력대상국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중점협력국	2011	2012	2013	2014	2015
베트남	139.49	200.32	234.56	178.84	217.16
라오스	33.48	23.52	27.07	28.98	87.63
캄보디아	62.23	56.15	60.54	68.62	65.85
방글라데시	80.02	46.76	44.71	68.06	52.16
에티오피아	11.61	20.44	27.34	42.91	46.02
필리핀	35.69	31.33	42.74	60.93	44.04
모잠비크	6.48	25.13	57.08	56.51	42.29
가나	5.06	23.44	9.85	15.82	39.84
인도네시아	24.29	37.23	31.5	21.49	39.55
스리랑카	43.36	51.49	44.93	44.78	27.46
몽골	30.5	31.79	27.67	30.76	24.2
우간다	2.41	3.99	11.42	12.16	22.95
르완다	5.82	7.11	12.48	16.46	20.93
볼리비아	1.35	5.64	6.76	17.21	20.62
네팔	20.97	20.77	17.09	14.44	17.56
카메룬	4.3	15.51	7.18	11.36	16.7
콜롬비아	8.17	5.37	21.61	20.04	15.12
우즈베키스탄	21.99	19.09	10.7	14.47	14.96
파라과이	5.71	8.29	8.78	10.76	11.54
페루	6.79	9.25	9.6	9.31	9.89
콩고민주공화국	5.99	6.85	6.29	11.52	9.71
동티모르	7.02	7.55	3.6	4.02	9.01
아제르바이잔	11.29	6.2	10.32	16.67	6.71
나이지리아	2.21	3.66	4.68	3.04	5.53
파키스탄	11.74	7.09	35.85	12.91	5.74
솔로몬군도	0.3	0.6	0.83	1.49	2.83
총계 (양자 ODA 대비 비율, %)	588.27 (59.4%)	674.57 (57.0%)	775.18 (59.2%)	793.56 (56.9%)	876 (59.6%)

7. 기타

우리나라 ODA의 비구속성 비율은 2014년 62.3%에서 2015년 58.0%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점진적으로 비구속성 비율이 증대되고 있다.

구속성·비구속성 지원현황 (약정액 기준, 백만 불, %)

〈출처: OECD DAC Statistics〉

연도	총 양자간 원조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구속성	비구속성 비율(%)
2006	524.65	9.99	97.7	416.96	1.9
2007	808.56	199.74	94.83	513.99	24.7
2008	1,197.74	428.84	89.79	679.11	35.8
2009	1,270.12	614.61	-	655.51	48.4
2010	1,589.61	567.54	-	1,022.06	35.7
2011	1,341.74	685.33	-	656.41	51.1
2012	1,423.12	783.7	4.49	634.93	55.1
2013	1,874.10	1,155.74	7.75	698.73	61.7
2014	1,900.41	1,183.48	11.99	704.94	62.3
2015	1,849.34	1,072.09	6.01	771.25	58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2015년 우리나라는 4,032만 불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분야별 ODA 전체 지원 규모의 1.91%에 해당한다. 그중 긴급구호에 대한 지원은 4,032만 불로 지원 규모의 1.74%다.

인도적 및 긴급구호 지원 현황 (약정액 기준, 백만 불, %)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도적 지원	24.62	35.63	56.08	14.39	20.72	21.21	16.64	36.84	72.92	44.19
지원 비율(%)	3.64%	3.38%	3.85%	0.99%	1.14%	1.31%	0.95%	1.65%	3.07%	1.91%
긴급구호	5.05	6.36	12.21	12.1	14.3	15.38	13.21	34.61	62.03	40.32
지원 비율(%)	0.75%	0.60%	0.84%	0.83%	0.79%	0.95%	0.75%	1.55%	2.61%	1.74%

우리나라는 환경, 성평등, 인권과 같은 범분야 이슈에 2015년 기준 약 1억 829만 불을 승인하였으며, 범분야 이슈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체 ODA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전략이 마련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부문 및 범분야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다부문/범분야	9.16	31.79	24.52	58.97	117.57	58.59	102.63	74.84	149.32	108.29
ODA 비율(%)	1.40%	3.00%	1.70%	4.10%	6.50%	3.60%	5.90%	3.30%	6.30%	4.70%

ODA



개발협력 분야의 민관협력은 기업 또는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이 ODA 사업에 개발 주체로 참여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오랜 기간 지속된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공여국들의 ODA 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공공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원과 참여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ODA와 민관협력

1. 민관협력 ODA의 개념 및 유형
2.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ODA 추진 현황

06

제1절 민관협력 ODA의 개념 및 유형



1. 민관협력 ODA의 개념 및 중요성

개발협력 분야의 민관협력은 기업 또는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이 ODA 사업에 개발 주체로 참여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민관협력 논의는 개발협력 분야에 공적 자금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가 유럽과 북미의 전통적 공여국과 OECD, UN,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공여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여성·인권·종교·환경 분야 등의 NGOs, 연구기관, 미디어 등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협력 주체의 다변화는 빈곤과 기아, 양성평등,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응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을 촉진하였다.

특히 최근 오랜 기간 지속된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공여국들의 ODA 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공공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원과 참여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분야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민간재원의 규모는 약 3.5배 증가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체 개발재원 유입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60% 수준에서 2010년 30%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비롯한 민간재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민간재원의 유입 확대는 특히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과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개발재원의 새로운 제공 주체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 개발재원회의에 참여한 50개국의 정상들은 MDGs 달성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해 협력대상국의 자체 자원, 민간 자금, ODA,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민간재원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한정된 ODA 재원을 보완하고, 민간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해 개발협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이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2015년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 개발재원회의에서도 그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2. 민관협력 사업의 유형

민관협력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유형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민간기관(NGO, 기업, 학계)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원조사업에서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과 유상원조 분야에서는 민자 사업 차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전통적 민관협력에서 기업의 개발협력사업의 참여는 자선적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업이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전략적 CSR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문제와 연계하고 기존 사업에서 수혜자로 인식되었던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에 포함시키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도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혁신적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이러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용어해설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의 합의문으로 협력대상국 내 자원의 조성, 국제 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및 국제적 개발 노력을 보완하는 민간자본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포함한 민간자본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금융시장 감독 완화 등이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포용적 비즈니스(Inclusive Business)

포용적 비즈니스(Inclusive Business)란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빈곤퇴치 등 개발성과를 추구하는 사업모델로서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1)공급자 2)소비자 3)기업가 4)피고용인 중 하나 이상의 역할로 유통과정이나 제조과정에 포함시키는 사업모델을 의미한다.

2015년 G20에서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레임워크(G20 Inclusive Business Framework)'를 발표하였는데, 포용적 비즈니스 형태를 수익추구 정도, 저소득층(BOP: Bottom of Pyramid)의 핵심기업 참여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포용적 비즈니스 활동',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로 분류하였다.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Inclusive Business Models)'은 비즈니스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기업의 가치사슬의 핵심에 BOP 계층을 포함하는 반면, '포용적 비즈니스 활동(Inclusive Business Activities)'은 기업의 가치사슬 내 BOP 계층은 부수적으로 참여시키되 시장수의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Social Enterprise Initiatives)'는 공표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운영되며, 반드시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특히, 유상원조 분야의 민관협력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BOT 방식은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건설하여 해당 인프라 및 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 운영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당초 투입한 자본금을 상환하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정부는 민간을 통해 부족한 개발 재원을 충당하고, 민간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인해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에 정부와 협력하여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아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이나 국가사업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에 도입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ODA 추진 현황



1. 민관협력 사업 추진 현황

1) 무상 ODA 분야의 민관협력 사업

우리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상 3대 원칙 중 하나로 ‘함께하는 ODA’를 설정하고, ▲민간파트너십 다양화 ▲기업 CSR/CSV 사업 연계를 통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 등을 세부과제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로 개발 NGOs였던 협력 대상을 대학(원) 및 기업 등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민간의 ODA 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우수한 민간파트너를 육성하고자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인큐베이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사업 수행역량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민관협력(시민사회 및 대학) 보조금 사업

KOICA는 1995년부터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인 민간부분(시민사회 및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부간 ODA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 교육, 농림수산 등 각 주제별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으로부터 제안서를 공모하여 선발·지원하고, 신생 기관의 사업 참여 진입 장벽 완화 및 파트너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현지조사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정책의제 형성 및 확산, 일반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포럼 및 이해 증진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몽골 주민지도자 양성교육 및 유목민 소득증대 지원사업(2015~2016)



몽골의 농촌지역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비교시 개발이 지체되어 있으며 빈곤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몽골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소득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농축산 기술부족과 지역농

민 대상 교육 기회 부재로 인하여 농축산 생산성이 저조하였으며, 지역주민간 협동성 및 마을 지도자의 역량 부재가 농가소득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KOICA와 지구촌나눔운동은 청년지도자 및 주민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자립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지도자 및 청년지도자 대상 농축산 기술, 프로젝트 운영 관리 기술 등을 전수하였으며,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하여 파일럿 사업도 지원하였다. 또한, 수료생 네트워크 구성 및 주민주도형 마을발전 모델 공유 등을 통해 주민 주도로 마을발전 및 소득증대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15~2016년 누적기준 275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축산 및 영농에 대한 소득증대 기술을 전수하였으며, 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유제품 가공기술 및 채소 재배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생산 후 판매, 가축 품종개량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달성하였다. 교육 및 파일럿 사업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ODA 활동

필리핀 도시빈민 직업 역량강화 사업(2015~2017)

필리핀 마닐라 동북쪽에 위치한 산호세 델몬테시는 강제철거 또는 태풍 및 화재 등 재난에 의한 이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역 내 인구 8만 5천여명 중 72% 가량이 절대빈곤계층이며, 보건 의료·복지·직업시설 등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 가장을 위해 타 지역에 거주하여 남겨진 여성 및 아동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등, 소외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권리증진이 시급하였다.

이에 KOICA와 사단법인 캠프는 봉제센터 및 제과제빵센터를 포함한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대상 봉제 및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였다. 훈련생은 여성 90% 남성 10%를 선발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

다. 또한 수혜자(여성)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운영수익은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직업 훈련센터 및 사회적 기업의 여성 종사자 자녀 대상 유치원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가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봉제센터



제빵 직업훈련

이 사업 결과, 사회적 기업 종사자 총 364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직업훈련생 311명, 수료생 263명, 국가기능사 2급 취득자 246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사업수혜자의 90% 이상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여성 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기업협력 프로그램(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2010년부터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재원과 전략을 ODA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업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 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및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의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ODA 활동

KOICA-포스코1%나눔재단 “인도네시아 찰레곤시 지역자립역량 강화사업”

인도네시아 찰레곤 시는 반톤 주에 속하며 지정학적으로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을 잇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수도인 자카르타와는 100km 떨어진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이다. 그러나 이 지역 내 비경제 활동인구는 40% 수준으로 지역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건설현장의 일용직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역 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포스코



1%나눔재단과 협력하여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제철소의 자회사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였다. 이 사업은 2014년 11월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에 종료되었으며, 우리정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이 각각 7억원씩 분담하였다.

이 사회적기업은 제철소로부터 내화물 분리, 제철소 내 녹지조성 등의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어 타 사회적기업 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사회적가치 실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운영을 통한 수익의 70%는 지역주민 대상 직업교육, 창업지원 등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재투자 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설립 이후 '16년까지 약 20개월동안 매출 규모는 14억을 달성하였고, '16년 한해만 사회공헌기금으로 7천 5백 만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였으며, 그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청장상(장관급)을 수상하였다.

이 사회적기업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회계, 인사 등의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용역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18세~25세 청년들이며, 6개월 단위로 사회적기업에 근로자 겸 훈련생으로 채용된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의 용역업무가 단순노무직이라는 점에 착안, 지역청년들에게 재취업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일에는 일을 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전일제 교육을 실시한다. 즉 일을 통해서 제철소 유관업무를 체득하며 임금소득을 보장받고,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은 인도네시아 포스코 제철소 협력사 및 현지 기업들에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16년말까지 1~3기 훈련생 전원(81명)이 수료하였으며, 이중 88%(누적 71명)가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이는 타 기업과 협력하여 실시한 직업훈련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수수료율은 21%, 취업률은 3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종료 후, 이 사업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한 사회적편익이 일정하게 유지 될 경우 2025년까지 고용창출, 재취업,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최소 34억으로 우리정부에서 투입한 자원 7억원 대비 최소 5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정부는 일정기간동안 이 사업의 감사위원회(Board of Committee)로 활동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ODA 활동

KOICA-삼성전자-GIZ “가나 전자분야 여성 직업훈련 사업”

가나는 비교적 안정된 정치체제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아프리카 역내 선두주자이다. 가나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중소기업 진입, 균형경제 달성,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가나 비전 2020(1996-2020)’을 수립해 현재 4차 국가개발계획을 실행 중이다.

그러나, 연평균 7%를 상회하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직업훈련원 등록률은 2012년 31%에서 2013년에 29%로 감소하고 있었다. KOICA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주로 농작물 재배와 판매에 제한되어 있고,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군은 남성에게 편중되고 있으며 직업훈련원 역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를 제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였다.

삼성전자는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 중산층의 확대로 전자제품 시장이 확대되며 전자분야에서 고용창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직업기술교육이 여성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삼성전자는 여성들에게도 전자제품 수리 분야의 직업교육을 제공한다면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쌓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KOICA는 직업훈련 분야에서 풍부하고 오랜 경험, 전문성, 사업수행역량을 보유한 독일 원조기관 GIZ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삼성전자와 여성의 전자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기로 하였다.

KOICA-삼성전자-GIZ “가나 전자분야 여성 직업훈련 사업(2014-2017)”은 첫째, 여성들이 전자부문의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함께 교육하고, 셋째, 학생 뿐 아니라 교사의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고, 넷째,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습실에서 직접 정비기술을 가르쳐 산업 수요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운영중이던 4개 직업기술학교와 협력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성평등적 관점을 사업의 성과관리에도 적극 도입하였다. 사업의 핵심성과를 ‘직업기술학교의 전자분야 여자 졸업생 비중을 2012년 4% 대비 2017년에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GIZ 사업 중 성평등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사업을 선발하는 2016 GIZ Gender Prize Award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 2016년 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글로벌 CSR부문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상을 수상하였다.



2) 유상 ODA 분야의 민관협력 사업

유상원조 분야의 민관협력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정부는 최근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유상원조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자사업차관

개발도상국으로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민자사업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민자사업법인(Project Company)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설계·금융·건설·운영 등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분야도 지원이 가능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양허성 차관으로 추진되는 유상 ODA 협력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을 연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공공사업 중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가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민간 기업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경우, 양허성 차관 지원으로 사업성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의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 투자를 유도한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주변 진입도로와 관련 시설 등 기반시설을 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을 유상 ODA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베트남 도로 등에 적용함으로써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에 유상 ODA 최초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을 승인한 데 이어 베트남 편반-년짜도로 건설사업 등 2건의 민관협력 사업을 승인하였다. 특히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은 라오스 남부 메콩강 지류에 충주댐 규모인 41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27년간 운영하며 태국과 라오스 국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세금, 배당 등의 수입을 통해 라오스 정부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이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이처럼 민간투자 활성화와 기술 이전, 고용 창출,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폭넓은 경제성장에 일조할 예정이다.

복합금융

우리 정부는 EDCF 자금과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을 결합한 복합금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기초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복합금융은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EDCF 차관대출 또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출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국가리스크를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민자사업차관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차관대출 부분은 유상 ODA로 계상된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라컨딩간 공항건설 사업에 EDCF 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을 결합하여 총 1억 불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교통·에너지·수자원 분야 등의 사업에 적합한 외부 재원으로서의 복합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금융의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2012년 EDCF-수출금융-개발도상국 정부로 구성된 SOC 협의체를 베트남과 필리핀에 구성하였으며, 그 대상 국가를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민관협력 사업에 관심이 높은 인도네시아 등 여타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제도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가 신용도가 낮아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보증(guarantee program)은 해당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관 앞으로 위험(risk)을 경감시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보증 제도는 전통적인 ODA에 해당하지 않으나, OECD DAC에서는 이러한 보증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공여국의 보증지원을 ODA로 계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상협력 전담기관인 EDCF는 보증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관련 제도를 2013년 말 정비하였으며, 현재는 발전 산업 등 민관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 금융기구들과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제개발 금융기구들과 다른 양자 원조기관들 역시 개발도상국 정부에 대한 보증 제도를 통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 민관협력 파트너십 확대

1) 정책결정 과정의 민간 참여

폭넓은 국내 민간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재원의 다양화와 확대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강화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 역시 시민사회, 기업 등과 다각도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ODA 부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정부의 ODA 정책에 반영하여 ODA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의 총괄 및 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는 17개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 함께, 시민사회·학계·경제계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에도 역시 민간위원이 7명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ODA 관련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민관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은 우리 ODA 정책과 사업의 주요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균형 있는 ODA 정책을 수립해 오고 있다.

2) 민관협력 내실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개발협력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개발협력연대는 해외 무상원조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민간의 첫 협력체제이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

우리 정부는 개발협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간 부문의 개발협력 참여는 2012년 8월 출범한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를 통해 촉진되었다. DAK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회원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민관협력체제이다.

2017년 6월 현재 DAK회원기관은 총 202개 기관이며, 각 회원기관들은 교육, 보건의료, 사회적경제, 성과관리, 임팩트투자, 장애, 젠더 등의 분과모임 및 세미나를 통하여 서로 다른 개발협력 주체들의 장점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적 민관협력 사업 추진

우리정부는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다면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혁신적개발협력프로그램(DIP)을 도입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2015년부터 도입된 DIP는 민간 부문이 보유한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협력에 반영함으로써 혁신적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재원을 ODA 사업과 연계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창업기업(Start-up)들의 적정기술과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DIP 사업으로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s, CTS)'이 있다. CTS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제작,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창업가가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을 제안하면, KOICA가 시드머니 제공 등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KOICA 프로젝트 혹은 글로벌 파트너 재원과 연결하여 양산(Scale-up)을 지원하는 혁신 유도형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보건 분야의 차세대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키트, 환경에너지 분야의 낙엽집시 제조 및 기계보급, 교육 분야의 제3세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점자모듈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키트 보급사업

말라리아는 한해 사망자수가 약 40만명에 이르고, 약 32억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2억명 이상이 신규 감염되는 심각한 질병이다. UN SDG에서도 말라리아의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이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핵심 사항은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말라리아 환



환자의 혈액을 입힌 카트리지를 진단기기 캄보디아 임상시험 진행에 투입, 해독

자에 대한 진단, 말라리아 환자의 추적과 관리이다. 우리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한국의 스타트업 노을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전략에 부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말라리아 진단은 고급 의료진에 의한 현미경 진단이나 저렴하게 보급되는 일회용 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의 진단은 비용도 높을뿐더러 실험실이 모든 지역에 분포된 것이 아님을 감안, 지역사회에서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더욱이 개발도상국 내 실험실 내 진단은 환경적 제약과 의료진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성마저 급격하게 저하되는 실정이다. 한편, 또 다른 방법인 일회용 칩의 경우는 보급의 간편성과 사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동형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낮은 정확도로 인해 말라리아 퇴치의 1차적 수단일 수는 없는 실정이다.

주식회사 노을은 우리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미경 진단법과 일회용 RDT(Rapid Diagnostic Test)의 장점을 두루 갖춰, 이 두가지 진단법을 혁신적으로 대체하는 진단기기 'AID MAT'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전세계 보건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검증 과정에 있다. AID MAT은 최고 수준(실험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에 의한 진단 수준)의 진단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간편한 사용방법으로 훈련받은 의료인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일회용으로 저렴하게 판매된다. 'AID MAT'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능을 탑재한 광학콘솔과 일회용 칩으로 구성되어있다. 손끝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일회용 칩에 투여하면, 광학콘솔이 기존 전문 의료인력이 진행하던 다양한 진단과정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진단한 환자의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한다. 광학콘솔은 독자적인 딥러닝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의료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며 말라리아 환자를 진단해낸다.

노을의 AID MAT이 CTS 프로그램에서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기술의 혁신성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때문이다. 우선 기술은 기존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던 RDT에서는 진단할 수 없었던 무증상 환자를 초기에 진단해낼 수 있으며, 쉬운 기기 작동법을 통하여 각 지역사회에 진단기회를 손쉽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로 정확도는 균일하게 유지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축적되어 향후 정확도는 더욱 개선된다. 이보다 더욱 혁신적인 부분은 개발도상국의 통신망을 통하여 말라리아 진단 데이터를 축적하며 관리한다는 점이다. 노을이 개발하는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환자 정보와 진단 정보,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여 관리된다.

노을은 우리정부에서 실시한 CTS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3억원을 지원받은 후, 해당 기술을 개발한 후 캄보디아에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임상시험을 완료하였다(Seed 1). 이후 우수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5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캄보디아와 말라위에서 10,000여명 대상으로 대규모 진단을 수행하며 WHO 임상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의료기기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유일하게 인구에 대한 추적과 보건시스템 상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모델이며,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스위스 바젤대학 열대의학공공연구소와 협력하여 WHO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세계 우수

의 보건 재단과 협력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의 국립말라리아센터(NMC)에서는 현재 적절한 검증 절차 완료 후, 1,000여대 보급을 요청한 상태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연 1,000억~2,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말라리아 진단기기 시장에 독보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동일한 기기와 기술을 통하여 말라리아 외의 다른 질병도 진단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ODA 활동

모로코 결핵 퇴치를 위한 스마트 복약관리 시스템 기반 m-Health 서비스 사업

결핵은 모로코의 주요 보건문제로 인구 10만명 당 약 8.6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여 전세계 결핵 사망률 상위 30%에 이르고 있다. WHO는 결핵퇴치전략으로 DOTS(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단기 직접 복약 확인 치료)를 제시하였다. 단기 직접 복약 확인치료는 결핵약 미 복용시 관리요원이 환자에게 투약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환자의 복약여부를 직접적이고 정기적으로 확인할 보건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하여 환자의 투약 중단이 결핵의 재발과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핵환자 가정에 스마트 약상자 설치

주식회사 제윤은 우리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5년 12월부터 모로코 내 35개 보건소에 ▲약 300여대의 스마트 약상자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무상보급하고, ▲약상자 사용 환자의 추적관리를 진행하였다. 제윤이 개발한 스마트 약상자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환자의 약 복용 여부를 스마트 약상자가 지역 보건소의 클라우드에 자동 보고하며, 장기간 미복용 시 보건소에 알람을 주어 현지 보건인력으로 개입하여 약복용을 지속하도록 유도하였다.

우리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윤이 진행한 스마트 약상자 시범사업의 결과 결핵 완치율은 95.7%, 치료 중단을 0%를 기록하였다. 이는 모로코 평균 완치율 85%, 중단을 7.6%보다 대폭으로 개선된 수치이다. 제윤과 함께 동 사업을 수행한 글로벌케어는 해당 사업의 결핵 퇴치 효과와 그 비용효과성을 세계 최대 결핵 학회인 리버풀 The Union의 46회 결핵국제학회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제윤은 이 사업의 보건 성과와 비용효과성을 수원국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하였고 이를 인정한 수원국에서 2017년 3월 모로코 탕헤르(Tanger) 지방의회가 신규 추진하는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제윤의 스마트약상자와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GIDF)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공여국의 ODA가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탈피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성장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원조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빈곤감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2012년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을 발족하였다.

현재 GIDF는 연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구·국제기구·해외 원조기관·개발도상국 정부 대표단은 물론 기업·학계 등 광범위한 국내외 민관협력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고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을 위한 ODA 사업이 주로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면,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은 EDCF와 같은 ODA 자금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은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개발도상국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달성하는 상생 발전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포럼은 이해관계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향후 협력대상국 정부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201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현장 사진(2015.12.7.)

본 포럼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제분야 SDGs 목표 이행을 위한 각 행위자들의 역할, 국내 정책 개선과제, 책무성 제고 방안 등을 고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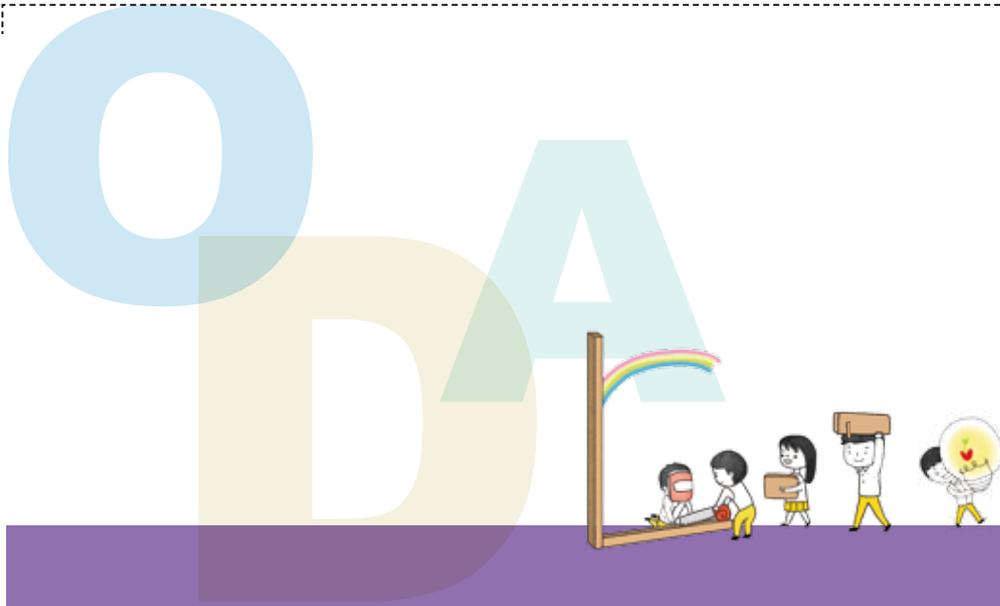
2016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세미나 현장 사진(2016.4.28.)

본 세미나는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SDGs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강화 추세 담론을 전파하고, 혼합금융, 민관협력 등 혁신적 개발재원 동원 방안을 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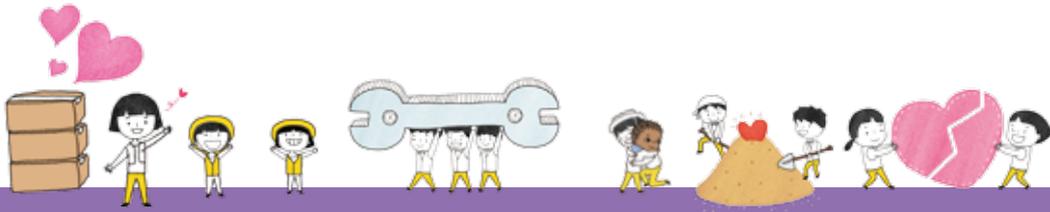
민간 부문과의 소통 노력

우리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 시민사회와의 정례 간담회를 2012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나 제도 개선계획을 시민사회와 공유하면서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정부는 포럼, 세미나 등 민간 부문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협력의 새로운 과제와 역할을 토론하고, 우리 ODA의 양적·질적 선진화 노력을 소개 및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을 계기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이 직면한 주요 개발협력 과제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DAC 회원국이자 모범적인 중견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의 G20 서울정상회의와 2011년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는 오늘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철학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협력대상국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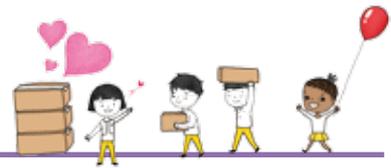


우리나라 ODA와 국제협력

1. 국제개발협력 논의 참여
2.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07

제1절 국제개발협력 논의 참여



2015년 국제사회는 향후 15년간 국제개발협력의 지침이 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채택하고 그 핵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제시하였으며,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개발재원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2015.9월) 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SDGs 이행 기여 의지를 발표하였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통해 국제사회의 SDGs 달성 기여를 향후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중견 공여국의 위상에 걸맞게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국제개발 환경에서 우리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선진화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에 적극 참여

UN 회원국들은 2015년 9월 UN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채택하였다.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과제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년~2015년)를 이어 향후 15년간(2016년~2030년)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지침이 된다. 특히 이 의제는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제시하였다. SDGs는 사회·경제·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약 8개월간의 정부간 협상(2015.1~8월) 및 UN개발정상회의 계기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채택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칠레와 함께 제도 구축에 관한 상호대화를 주재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요소인 제도 및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 ODA 정책의 목적을 SDGs 달성 기여로 설정하였고, 우리 개발 경험에 기반한 비교우위 분야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2016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평가 체계 확립에 건설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의제의 이행을 평가하는 첫 번째 회의인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이 ECOSOC 주관으로 2016년 7월 개최되어 ECOSO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주재하였고, 여타 21개국과 함께 자발적 국별 평가에 참여하여 우리의 SDGs 이행 준비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SDGs 이행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2.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채택 기여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에서 SDGs 이행을 위한 개발재원 조성의 기본틀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가 채택되었다. 이 행동의제에서 국제사회는 선진국이 공약한 ODA/GNI 0.7% 달성 목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조세 등 개발도상국 국내재원 동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민간 영리활동과 개발도상국 개발목표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ODA 확대 노력, 취약 계층 지원,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 지원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기술협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아디스조세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 개발재원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의 개발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기여방향을 제시하였다.

3.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출범과 활동

2011년 우리나라가 개최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개발 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에 합의한 후, 2012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원조효과 작업반 최종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DC)’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는 부산총회에서 합의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상호보완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는 한편, 공통의 원칙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축된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이다. 또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총회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서 정부(OECD DAC 공여국, 협력대상국, 신흥공여국), NGOs, 민간, 의회 등 부산총회에 참석한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함으로써 부산총회 개최국으로서의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2014년 제1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 고위급회의 계기, 연례 국제회의 및 연수 프로그램의 자발적 개최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총 3차례의 포럼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함으로써 550여명에 달하는 개발주체들을 대상으로 개발경험 공유와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현장에서의 개발효과성 달성을 촉진하고,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의 제도화에 기여해 왔다.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출범 1년을 맞이하여 2016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포럼 및 연수 프로그램에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의 성과 평가 및 미래 방향 논의”를 주제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00여명의 개발협력 주체들이 참석하여, 개발효과성 분야에서 그간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2016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2차 고위급회의의 구체적 성과를 포함한 SDGs시대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발전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이 포럼을 개최하여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를 통한 개발효과성 달성 노력에 기여하는 한편, 민간,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포럼이 보다 포용적인 상호학습의 장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4. OECD 개발논의 참여

2015년 SDGs 채택, 개발재원 관련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채택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글로벌 개발 의제의 등장 등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의 현대화와 개발재원의 확대 등의 논의에 주력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OECD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 관련 논의에도 점차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2016년 OECD DAC 환경네트워크 부의장직 수임, OECD 개발센터 운영이사회 부의장직 수임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개발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DAC 회원국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학습을 도모하고 모범관행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어 2017년 우리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동료검토를 받았다.

5. G20 개발 논의 지속 기여

G20 개발의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글로벌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G20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논의를 뜻한다. G20 개발의제는 2010년 우리나라가 개최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 주도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G20 개발실무그룹(Development Working Group) 공동의장을 수임하는 등 G20 개발의제 진전 및 개발 공약 이행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한편, 2015년 9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 이후 개최된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대한 G20 행동계획(G20 Action Plan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여, 15개의 지속가능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G20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개발실무그룹 논의 및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대한 G20 행동계획’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행동계획 채택에 기여하였으며, G20이 이 행동계획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G20 차원의 이행 노력에 지속 동참할 예정이다.

G20 개발 논의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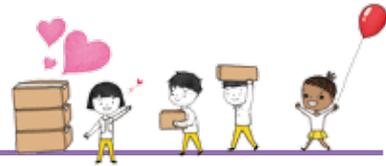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이 채택되어 G20 내 개발의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실무그룹(Development Working Group)'이 발족되었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저소득국의 자생력 강화와 경제성장 제고를 목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중심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개발도상국(특히 저소득국)의 성장가능성 제고 관련 성과 도출 지향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등 6대 개발원칙에 합의하였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은 G20이 구체적으로 기여할 9개의 개발 핵심 분야(Pillar)로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 복원력 ▲금융 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지식 공유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이행 주체와 시한을 명시하였으며, 2012년 G20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녹색성장'을 10번째 분야로 추가하였다.

2013년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는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서 나아가, '신규행동계획(Development Outlook)'이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책임성 프로세스 핵심그룹(Core Group) 위원으로서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신규행동계획 수립에 기여하였다. 2013년 신규행동계획은 G20 개발의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핵심 분야를 5개(식량안보,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금융 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조성)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2절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사회는 파리선언을 통해 공여국 간 원조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ODA 사업의 효과성 개선을 위해 분야, 방식, 절차 등에 있어 공여국들 간 개발협력의 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OECD DAC은 공여국 간 원조 조화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자문 그룹을 구성하여 기관 간의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원조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다른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조화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G20 서울정상회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통해 새로운 개발체계가 형성되는 가운데 상호책임에 기반한 ODA의 조화와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여국들의 ODA 활동 간의 조화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해야한다는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공여국들과의 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주요 선진 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선진 공여국들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추진함으로써, 공여국 간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

부는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호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EU, 벨기에 등 총 11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선진 공여국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ODA 사업수행 차원에서의 조화와 효과성 개선 노력을 도모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여국 협의체 참여, 공동사업 추진 외에도 공동사업 조사와 평가 등에서도 여타 공여국과의 조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여국들과의 협력강화 사례 : 미국 USAID

지난 2014년 KOICA-USAID 본부간 체결한 MOU 및 2015년 양국 정상회담 시 Joint Fact Sheet 상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포함되면서 KOICA와 USAID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양 기관은 공동 프로젝트 수행, 봉사단 교류, 공동 평가, 공동 연수 등을 통해 보건, 과학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2017년 신규 협력사업으로 캄보디아에서 글로벌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위한 Gr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GCD)에 대해 공동 참여 및 사업 지원으로 개발도상국 내 임신부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4.2월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 항생제내성균 등 전세계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코이카와 USAID의 협력 대상국 중 중복되는 12개국*을 중심으로 현지 사무소 간 ▲현황조사(baseline assessment), ▲로드맵 수립 및 ▲사업계획(work plan)수립 시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협의하므로써 공여국간의 원조조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 말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라오스, 요르단, 페루

2.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다자개발기구 및 다자개발금융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제기구의 축적된 전문성, 선진적인 기술과 전략을 학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WFP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UNDP의 경우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임기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주요 개발기구의 집행이사국으로서 기구의 운영에 관한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개발협력 관련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그 결과를 해당 기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전략에 반영함으로써 모범적 중견 공여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규범에 발맞추어 우리 ODA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리 ODA의 강점과 성과를 널리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1) UNDP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우리 정부는 유엔 내 최대 개발기구이자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구인 UNDP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강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UNDP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핵심적인 수단인 정규재원 기여금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세 번째로 집행이사국으로 진출하여 UNDP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UNDP 또한 우리나라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모델이자 UNDP에 대한 지원 규모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핵심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2002년 이래 매년 한-UNDP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측간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외교부 소관 분담금으로 「한-UNDP SDG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UNDP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9년 이래 KOICA 소관 분담금으로 운영해온 「한-UNDP MDG 신탁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해온 만큼, 우리 정부는 그간의 국별사업의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UNDP의 주제별 신탁기금에 선진적으로 기여하는 등 다각적인 형태로 UNDP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설립된 UNDP 서울정책센터(USPC)를 통해 우리의 개발경험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여타 개도국의 개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개발해법파트너십(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반부패, 여성역량 강화, 거버넌스 등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모델화하여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렇듯 우리의 개발경험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개발의제 논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협력

2015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생활수준의 격차는 여전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 2(SDG 2)를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으로 규정하고 농촌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모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또한 우리나라와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농촌지역개발 ODA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OECD, UNDP, WFP 등과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 OECD와 공동연구 보고서인 「21세기 농촌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간하였다. 2014년 1월 OECD와 개발도상국들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연구를 위해 시작한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들과, 중국, 베트남 등 국제사회의 대표적 농촌개발운동 사례를 비교·연구하였다. 2017년에는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농촌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OECD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론적 내용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농촌개발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용자

2010년 OECD DAC 가입 및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ODA 지원 규모 및 비구속성 차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 규모가 감소하고 국제 원조기관들의 재원 확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조기관 사이에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MDB와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MDB가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원조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원조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MDB 협조용자를 주목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4년에 필리핀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에 대하여 ADB와 공동으로 차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EDCF 최초로 MDB와의 협조용자를 시작했고, 이후 2016년말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은행(WB) 등 10개 기관과 총 39개 사업에 대하여 1,652백만불을 협조용자로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MDB와 중기 협조용자 규모·정보공유·인적교류·정례 협의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여 MDB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위해 MDB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전략 및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인 아프리카 농업단지개발사업에 우리나라의 ICT 기술을 활용한 협조용자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기상정보시스템과 ICT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농민소득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MDB와의 네트워크 및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면서 향후 EDCF 단독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사업, 기후변화·수자원 개발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협조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EDCF-MDB 협조용자 MOU 현황

ADB	AfDB	WB	IDB
6억불('15.5~'18.5)	6억불('14.1~'18.12)	3억불('15.4~'19.3)	1억불('15.3~'17.2)

4)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우리나라는 2011년 기존 양자협력 중심의 KSP를 공여국-국제기구-협력대상국 간 다자협력 형태로 발전시킨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동 컨설팅 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국제기구의 지역별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협력대상국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KSP의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이후 공동 컨설팅 사업을 함께 수행한 국제기구는 ADB, IDB, AfDB, WB 등이 있으며, 2013년부터는 안데스개발은행(CAF) 등으로 협력 기관을 확대하였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은 기존 양자협력(한국-자문대상국) 형태의 KSP 국가 정책자문 사업을 삼각협력(한국-국제기구-자문대상국) 형태의 사업으로 발전시킨 형태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국제기구의 개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정책자문의 시너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의 기본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함에 있다. 그리고 국내 개발 컨설팅 업계, 전문적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 및 업체의 공동 컨설팅 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 전문인력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제고하여 우리 인력들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구체적으로 상품화하고, 개발협력 컨설팅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3. 혁신적 개발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이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재원으로서,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기술 및 재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발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혁신적 개발재원의 한 종류인 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 제도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용하여 왔다. 항공권연대기여금은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 조성된 재원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메커니즘으로서 한국, 프랑스, 칠레, 모리셔스, 니제르, 말리 등이 도입·운용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통해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권 1매당 1,000원을 부과·징수(내·외국인 불문)하여,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국제보건기구 및 NGOs의 질병퇴치 및 모자보건 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2017년 1월 1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기금화에 따라 이 기여금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향후 이 기금을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에 집중 활용하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ODA 사업을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 재원으로서 이 기금을 차별화해 나가는 한편, 항공권연대기여금 제도의 선도적 도입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 재원을 활용,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 예로, 3대 질병(HIV/AIDS, 말라리아, 결핵) 퇴치를 중점 지원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글로벌펀드(Global Fund)에 2013년-2017년간 각각 연 400만불 및 연 200만불을 지원 중이다. 또한, 백신 보급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 아동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도 2015년-2017년간 연 400만 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UNITAID 집행이사국 활동, GAVI 이사회 참여를 통해 여타 회원국들과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및 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GAVI에 대한 기여금을 활용하여 게이츠재단과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제3차 개발재원총회(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이후,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촉매제로서의 ODA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민간재원 동원은 단지 재원 동원 규모(more finance)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better finance)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 흐름에 따라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협력방식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USAID Grand Challenge for Development 사업 등 타 원조기관, 국제 민간 재단 등과의 해외파트너십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다양한 개발주체 간 원조 조화

우리 정부는 공여국과 국제기구들 및 협력대상국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개발주체 간 원조 조화를 통해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6Banks 협의체'는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공여국 대표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ODA 협의체로서, 베트남 전체 ODA 수원액의 약 94.6%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1999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세계은행(WB)의 현지 사무소 간 협의체인 3Banks로 출발하여, 2001년 프랑스 국제개발청(AFD)과 독일부흥금융금고(KfW)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5Banks가 되었다가 2007년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입하면서 현재의 6Banks로 확대되었다.

6Banks는 ODA사업 관리와 성과 제고를 위한 베트남 내 관리절차 및 체계에 대한 정책제언과 더불어, 6Banks 간 경험과 교훈 공유 및 공동 대응을 통해 ODA 사업시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6Banks는 정례협의를 통해서 ODA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협조용자 사업을 함께 지원하기도 하는데,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과 메콩델타지역의 대규모 도로 및 교량 건설에 대한 집중지원이 그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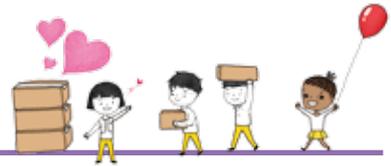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에 우리나라는 3차에 걸쳐 EDCF를 통해 총 60백만불을 지원하였고, 일본

JICA, 프랑스 AFD, WB, 캐나다 CIDA, 호주 AusAID(現 DFAT)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차관이란, 베트남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공여기관은 재생(Renewable) 등 기후변화 관련 각 기관의 장점이 있는 분야에 특화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메콩델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은 국제사회의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과 베트남 정부의 교통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세계 제3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 쌀 수출량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이지만 교통인프라 부족이 경제개발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메콩델타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였다.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러 원조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었고, 우리나라는 ADB, 일본 및 호주정부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EDCF를 통해 단계적으로 밤콩교량 등 6개 사업에 6.3억불을 지원함으로써 차관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6Banks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는 베트남 내 제2위의 양자간 ODA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ODA의 가시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제3절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는 오늘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철학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이 더 이상 일방적이고 단순한 원조자금과 물자의 제공이 아니며, 협력대상국이 일방적인 원조 시혜의 대상이 아닌,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원조에 의존해 오던 세계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이 주인의식과 자립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협력대상국과의 평등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11년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 출범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을 통해 개발경험 공유와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개발효과성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ODA 사업의 현장화 추진

우리 정부는 ODA 사업의 현장화 추진을 통해 협력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과 개발 우선순위, 제도와 집행체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대상국의 우리 재외공관은 개발 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협력국 주재 공관을 중심으로 'ODA 현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개발협력 사업 시행기관 및 NGOs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사업을 조정해 오고 있다.

KOICA는 협력대상국 현장의 각기 다른 개발 환경과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ODA 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위해 ‘ODA 현장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07년 총 27개국에서 운영해 오던 KOICA 사무소를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 지정을 반영하여 44개국으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해외사무소를 통해 협력대상국 및 주요 공여국과의 협의를 상시 실시하고 밀착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 삼각협력 확대 지원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ODA 사업수행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내 중소득국가로 성장한 신흥 공여국이 주변 개발도상국에 발전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는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신흥 공여국이 주도하는 남남협력에 전통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 등이 참여함으로써, 두 개의 공여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력대상국과 협력하는 구조를 삼각협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의 개발협력 활동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효과성을 개선하는 이행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협력 부문에서는 1995년부터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집트, 멕시코, 칠레, 태국 등 다수의 신흥공여국과 협력하여 기술협력 형태의 공동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알제리 씨감자 생산기술지원사업’에 페루의 감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기술을 이전한 사례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무역정책 수립,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공동 연수과정을 지원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98개 과정, 1571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다. 2016년에는 KOICA의 팔레스타인 약물치료센터 건립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 연수를 터키의 TIKA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삼각협력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효과적 삼각협력 추진을 위해 한국의 삼각협력 추진 방안 및 주축국 파트너 선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외교부는 삼각협력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OICA를 통해 파트너십 구축 및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멕시코, 칠레, 터키, 태국 등과 MOU를 체결하여 양국 및 기관간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삼각협력 MOU 체결 현황

체결국가	싱가포르	터키	브라질	칠레	멕시코	태국
체결연월	2010. 06	2011. 03 / 2014. 08	2011. 12	2012. 10	2014. 04	2014. 06





우리나라의 ODA는 1987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치 및 1991년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6년 ODA 총괄 및 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및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ODA 양과 질을 개선해 왔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ODA 성과와 더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ODA 정책방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우리나라 ODA의 발전 방향

1.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2. 효과적이고 투명한 ODA
3. 함께하는 ODA

08

제1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1. ODA 규모

1) ODA 규모의 빠른 증가

그동안의 우리나라 ODA 성과를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ODA 규모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외원조를 추진했던 1987년의 경우, 우리나라 ODA 규모는 약 194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후 ODA 규모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처음으로 ODA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섰다. 2017년 ODA 예산 규모는 약 2조 6,3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ODA 규모의 증가 추세를 다른 선진 공여국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선명하게 대비된다. 최근 10년 동안의 ODA 규모를 살펴보면, 선진 공여국(DAC)의 경우 2006년의 1,054.2억 불에서 2015년 1,314.3억 불로 24.7%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의 455백만 불에서 2015년 1,915백만 불로 약 320.7% 증가하였다. 이러한 ODA 규모 증가속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매년말 OECD에서 발표하는 ODA 확정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2년에 ODA 증가율이 각각 43.8%와 20.6%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5위(3.5%)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ODA 규모를 확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ODA 규모의 확대

ODA 규모 확대는 우리나라의 성과이면서, 한편으로는 개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약 12%의 연평균 증가율로 ODA 규모를 증가시켜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6년 12월 발표된 OECD의 2015년도 ODA 지원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순지출 기준 약 19.2억 불로 29개 DAC 회원국 중 14위를 차지하였다.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23위에 해당한다. 이는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 확대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2016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ODA/GNI 비율을 0.2%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0.3% 달성이라는 장기목표도 함께 제시하여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다.

2. ODA 추진체계

1)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

1963년에 첫 대외원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ODA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조정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ODA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양·다자원조와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대외원조 기본법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해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 추진체계 등 기본 골격을 정립함과 동시에, 2006년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 및 사업 조정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2010년 1월에 국무총리실(現 국무조정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과 ODA 총괄·조정 실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ODA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ODA 통합추진체계 하에서 ODA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2009년 8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및 통합평가 매뉴얼 등을 수립하여 ODA 통합평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이후, 우리나라의 ODA 정책,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 ODA 통합추진 및 협업 내재화

다수 기관이 ODA 사업에 참여하고,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주관기관이 분리된 우리나라의 ODA 체제 하에서, 통합적 ODA의 추진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이러한 통합추진체계와 ODA 협업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향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행과 개별 사업의 조율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심점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하의 ODA 정책 및 전략이 개별사업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간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통해 무상원조를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내재화하고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체, 5자 협의체, ODA 현지협의체 등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 ODA 기관 간 합동워크숍, 인사교류 및 해외사무소 공동근무 등을 지속 추진하여 협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3. ODA 정책 및 전략

1) ODA 통합추진전략 마련

그간의 우리나라 ODA 추진과정에서 또 다른 의미있는 성과는 ODA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ODA 사업은 現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주관하면서, 유·무상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비전과 전략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5년 11월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유·무상간 연계 및 총괄·조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 문서는 이후의 통합 전략문서를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ODA 정책 및 전략은 통합추진체계를 정비한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0년 10월에는 우리나라의 ODA 비전과 추진방향, 3대 선진화전략 등을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ODA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문서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ODA 규모 확대 계획과 양·다자 및 유·무상간 비율 등이 결정되었다. 또한 유·무상 원조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통합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기관별로 각각 수행하던 ODA 평가·홍보·통계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추진된 2011년~2015년간의 ODA를 평가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 등을 고려하여, 2016년~2020년간 적용될 ODA 중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2차 기본계획에는 2016년~2020년 5년간의 ODA 기본방향, ODA 규모 확대 목표, 재원 운용 계획, ODA 통합추진체계 고도화 및 ODA 내실 제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24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유·무상 통합지원전략인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 작성을 모두 완료하였다. 이 외에도 ‘인도적 지원전략(2015.3월)’과 ‘다자협력전략(2016.2월)’ 수립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다자협력 분야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2) 정책일관성 제고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 강조되고 있다. 공여국이 개발협력 정책과 무역·안보·환경 등 관련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 DAC에서는 지난 2012년의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정책 일관성(PCD)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의제를 수립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중장기적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국내 정책 간 사례분석 등을 통해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 일관성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일관성 제고 노력을 각 부처별 정책 수립 및 집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4. ODA 사업 추진 절차

1) ODA 사업 추진 절차 정착

ODA 사업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각 ODA 사업의 내용이 국가적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맞게 구성되고, 기관 간 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

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 및 국무조정실에서는 모든 ODA 기관의 차년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조정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2011년 이후 운영되어 왔는데, 매년 조정 절차가 개선되고 있다. 예컨대 조정기준을 체계화하고, 예외 없이 모든 기관들이 사업계획을 검토 받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검토·조정 시기를 앞당겨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예산 당국(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조정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2013년에는 이와 같은 '사업 1년전 심사·조정' 절차 외에 사업 2년 전부터 각 기관의 ODA 예비사업 목록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사업 1년 전 심사·조정'의 중복사업 조정 및 부실사업 배제 등과 달리, 사업 기획의 초기 단계부터 기관 간에 예비사업 목록을 공유하면서 사업 간 실질적인 연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데 있다. 2015년에는 그간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도 그 증가세를 고려하여 ODA 통합추진체계를 통해 심사, 조정,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2) ODA 사업 추진 절차 개선

ODA 통합추진체계가 구축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ODA 사업 추진 절차는 매년 강화되어 왔으나, 개발도상국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이 보다 강화되고 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간 연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시행 중인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을 지속 점검·보완함으로써 재외공관, 국내기관 및 수원국의 수원총괄기관간 협의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ODA 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국제기구 및 여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2013년에 도입한 '사업 2년전 예비검토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유·무상간 패키지형 연계사업을 다수 발굴하고자 하며, 'ODA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사업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2절 효과적이고 투명한 ODA



1. ODA 성과 관리

1) ODA 평가시스템 도입

우리 정부는 2010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ODA 사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와 같은 거시적 기본틀을 바탕으로 개별 ODA 사업들이 협력대상국 현장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8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하고 ODA 통합평가의 기틀을 마련한 후, 각 부처·기관의 ODA 사업 자체평가가 일관된 기준과 절차 하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모든 ODA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소 위원회를 통해 매년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소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ODA 성과 관리 강화

ODA 사업이 증가하면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ODA 사업은 주로 해외에서 집행되는 특성상, 국내 정책에 비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ODA 사업에 대한 각 기관의 자체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장치 마련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외에 병원·학교·도로·상하수도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은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 ODA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 심사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기존 실적 평가 결과 반영 여부 및 그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ODA 평가의 환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 부서를 설치하고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자체평가 건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종료 5년 후 운영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기관별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사후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 개발효과성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계기 국제협력 패러다임이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되었으며, 부산총회 주요 공약 및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2012년 6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PEDC :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이 공식 출범하였다. GPEDC는 정부(공여국, 수원국, 신흥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의회 등 개발협력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 플랫폼으로 개발협력의 질적 효과제고와 관련된 규범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원칙 이행 점검을 위해 10개의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GPEDC 공동사무국인 OECD·UNDP 주관 하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공여국인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5개 지표는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 공개(투명성) ▲개발협력의 단·중기 예측가능성 ▲수원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시스템 활용 ▲원조의 비구속화 등이다. 2016년에 발간된 제2차 GPEDC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개발원조의 중기 예측성이 2013-15년간 30% 이상 개선되었으며 ▲비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2010년 32%에서 2014년 53%로 20% 이상 확대되어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개발효과성 논의를 국제사회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및 개발도상국 이행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부산원칙 이행 촉진 및 GPEDC 제도화 등에 기여해오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현장에서의 개발효과성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 체제 내 GPEDC의 위상 정립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3. ODA 투명성

정부는 ODA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조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가된 원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원조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ODA 사업 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1월 처음으로 시행계획에 기관별 ODA 사업 목록과 예산을 수록하였으며, ODA 통계시스템을 통해 협력대상국별 ODA 지원내역을 공개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개별 ODA 사업의 세부 정보를 수요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 12월에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하여 ODA 사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개 항목과 참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ODA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ODA 사업 기획, 착수, 수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그 결과의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함께하는 ODA



1. 국제협력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월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일조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제7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G20 내 개발의제 도입을 주도한 이래 G20 차원의 개발 논의에 지속 기여해 왔으며, 특히 2013년~2015년간 G20 개발실무그룹(DWG)하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2개 분야의 공동조정국(co-facilitator)으로 활동하면서 G20 내 개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는 데 앞장섰다. 또한 2014년 이후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포럼 및 연수프로그램을 매년 개최하여 부산원칙 및 공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달성에 노력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국제개발 논의에서 발휘한 주도적인 리더십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OECD DAC도 2012년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OECD DAC 사무국은 2015년에 실시된 동료검토 결과의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에서 한국을 '견실한 공여국(solid development provider)'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의장국 수임 등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UN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협력하여, 수원국 지위에 있던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1963년 설치되었던 UNDP 한국사무소(UNDP Country Office in Korea)를 2009년 UNDP 서울정책센터(UNDP Seoul Policy

Centre)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여타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개발해법파트너십(Development Solution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반부패, 여성역량 강화, 거버넌스 등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모델화하여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구축한 우리의 역량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국제개발 환경에서 우리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노력을 견인하고, 주요 공여국들과의 상시 협의채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 민간협력

1) 민간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전 세계적으로 개발협력에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개발목표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협력에 있어 전문성, 기술, 자원 등을 지닌 민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 왔다. 특히,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민간 부문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을 활용하여 ODA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교육, 보건 등 주제별로 사업을 공모하여 민간에서 제안한 다양한 사업을 민간파트너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차관, 복합금융, 보증제도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2년 8월 출범한 개발협력연대(DAK)를 기반으로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 간의 교류 및 파트너십 형성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협력사업에 유입하고자 혁신적개발협력프로그램(DIP)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12년 발족한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을 통해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 등이 매년 모여 민간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 민관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우리정부는 기존의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파트너들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각화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공유가치창출(CSV)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ODA 사업과 연계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지원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한편, ODA의 확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국제 ODA 시장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연간 ODA 조달시장 규모는 약 1,360억 불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의 ODA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ODA 사업의 참여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제 ODA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컨설팅 분야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민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3.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

1) ODA 정보제공 확대

ODA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원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까지 ODA/GNI 비율 0.2%를 목표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ODA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해 ODA 통합홍보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0년 1월에 ODA 통합홍보 T/F(現 통합홍보 전략회의)를 구성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통합홍보 추진체계를 구축한 이후, 우리 ODA를 상징하는 통합 BI(Brand Identity)와 캐치프레이즈(“대한민국의 기적, 이제는 나눔으로”)를 마련하여(2011.11월)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 1월에는 ODA 통합 홈페이지(www.odakorea.go.kr)를 개설하여 정부의 대국민 소통 및 정보제공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는 우리나라의 ODA의 비전,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ODA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2) ODA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정부는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ODA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ODA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인종, 문화, 종교를 넘어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WFK), 청년인턴 사업 등을 통해 청·장년층이 현지 개발원조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는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발협력사업 참여자들이 글로벌 청년인재 및 지역 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성장하여 국제기구 진출 등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약어표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F	Asian Development Fund	아시아개발기금
AFD	The Agence Francaise de Developpement (French Agency for Development)	프랑스 국제개발청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호주 국제개발청
CAP	Consolidated Appeal Process	UN합동지원요청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UN중앙긴급대응기금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국제개발청
CIDC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위원회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소련권 독립국가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통합국가협력전략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글로벌 사회공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개발협력연대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개발컨설팅사업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or United Nations	UN식량농업기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선진 인도 지원 공여국 협의체
GIDF	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um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
GIZ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 Zusammenarbeit (German Socie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독일 국제협력공사
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HLF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DA-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국제개발기구 채무탕감 지원방안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FC	International Finance Cooperation	국제금융공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분쟁 및 취약국 지원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
KfW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독일부흥금융공고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SP	Ko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자간투자보증기구
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OCHA	Office for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인도지원조정실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아프간지방재건팀
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구조조정 프로그램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TIKA	Turkis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gency	터키 국제협력개발청
UN 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무역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개발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교육과학문화기구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인구기금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난민기구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전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아동기금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UN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WB	World Bank	세계은행
WFK	World Friends Korea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홈페이지 www.odakorea.go.kr
인쇄 디자인나경(☎02-3472-2916~7)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대한민국의 기적
이제는 나눔으로

